

한 · 일 FTA와 한국농업

2004년 2월 16일(월), 13:00 ~ 18:00

서울농업무역센터(aT센터) 3층 중회의실

주 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 원 : 농림부

목 차

1. 세미나 일정	3
2.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5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과제	43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4. 한·일 FTA의 정치학적 접근	95
유현석(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세미나 일정

13:00-13:30	참가등록
13:30-13:45	개 회 식 개회사 : 이 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3:45-15:15	제1주제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 좌 장 : 허 길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발표자 : 정 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김 도형(계명대 교수) 고 재갑(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 전무) 정 재화(한국무역협회 FTA 팀장) 김 수환(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15:20-16:50	제2주제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과제 - 좌 장 : 현 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 발표자 : 최 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이 명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조 선기(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지원처장) 신 동헌(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16:55-18:00	제3주제 한·일 FTA의 정치학적 접근 - 좌 장 : 안 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발표자 : 유 현석(중앙대 교수) - 토론자 : 박 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 영종(카톨릭대 교수) 김 한수(외교통상부 심의관)
18:00-19:00	리셉션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정 인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 I. 서론
- II.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 III. 기존 한·일 FTA 연구결과 및 문제점
- IV. 경제적 효과의 추정
- V.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정 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1997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0년말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를 제안한 이래, 이를 검토하기 위한 양지역의 공식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과의 FTA 검토를 위한 일·아세안 FTA 연구회를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간 FTA 논의도 민간연구기관 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진전되고 있어,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국간 FTA 체결 논의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공식적인 언급은 1998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구라(小倉) 주한 일본대사는 1998년 9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 모임에서 “21세기를 향한 한·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한·일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반덤핑규정, 쌀시장의 추가개방과 같은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양국의 경제적 연관성에 기초한 기업간 제휴를 확대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EU, NAFTA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한·일 양국의 정부간 FTA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에서 이루어졌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하였고, 양국 정부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아지켄)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1999년 3월 일본의 Obuchi 총리는 방한하여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0년 5월 KIEP-아지켄은 한·일 FTA 연구결과 1차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2

차심포지움은 9월 동경에서 실시됨).

2000년 9월 김대통령은 방일중 양국간 FTA에 관한 민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쌍무적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기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와 IT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의하였고, 양국은 이에 합의하였다. 2001년 상반기에 양국은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하였으며, 9월 7-8일 서울에서 1차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포럼은 한·일 FTA가 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FTA 추진을 위한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는 문제 등 한·일 FTA와 관련된 포괄적 이슈에 관해 심층적으로 협의하였다. 지난 1월 25일 동경에서 개최된 양국간 FTA 비즈니스 포럼 2차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간 FTA의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2002년 3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한·일투자협정(BIT)을 서명하고, 産官學으로 구성된 한·일 FTA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간 FTA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양국 정부는 오는 7월 중순부터 공동연구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II.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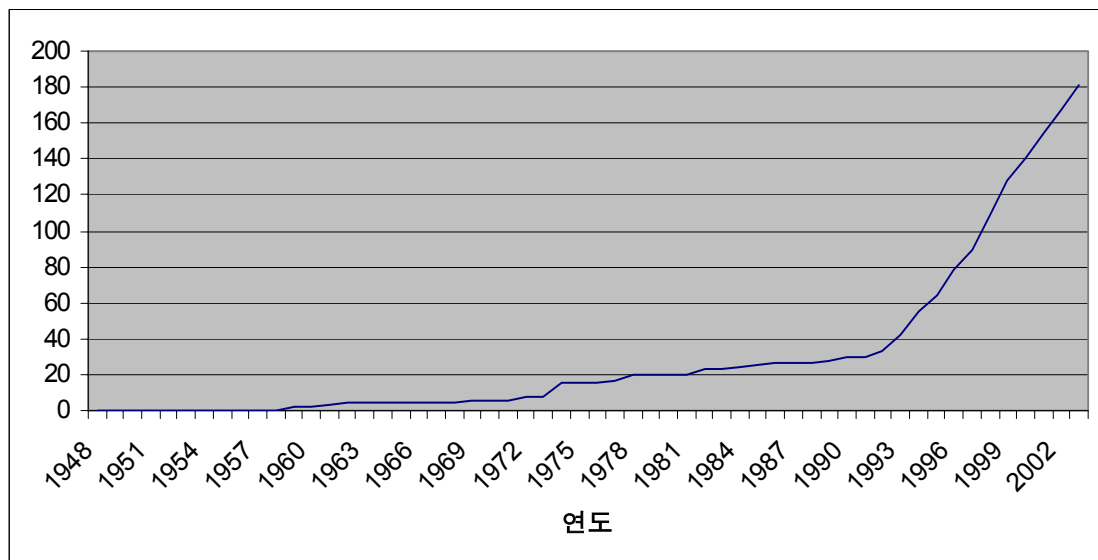
1. 한국의 FTA 체결 추진배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에 배타적인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을 자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이 FTA 정책을 추

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이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처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 자체도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1> 지역무역협정의 연도별 추이(1948-2003간 누적치)



주: GATT/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으로서 현재 활동중인 협정만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WTO 홈페이지(www.wto.org)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국기업은 첨단

기술보다는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온 반면,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과제가 절실한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바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인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면 한국을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내시장 규모와 투자제도의 완비가 중요하므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진다.

FTA를 체결할 경우 확대된 역내시장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역내국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된 사례로 NAFTA하의 멕시코를 들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논의가 시작된 1991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협정이 발효된 1994년 이후에도 FDI는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

<표 1> 멕시코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1990-1999)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유입액	2,549	4,742	4,393	6,715	10,973	9,526	9,186	12,831	10,238	11,23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2. 일본의 FTA 정책 추진배경

일본 經濟産業省(2001)의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따르면, 일본은 WTO

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지지하고 동시에 지역주의에 참여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적인 통상환경을 자국의 수출을 증진하는 데 적절히 활용해왔다. 특히 WTO 분쟁처리제도로 많은 혜택을 향유해 왔음을 인정하고, WTO 분쟁해결수단을 제3자에 의해 중립적이며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정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이 향후 다자체제 아래서 자유로운 무역환경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이행하는 데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다자체제 아래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WTO 체제가 다양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상의제가 매우 광범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요 교역국의 FTA 체결 등 외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WTO 체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며, 뉴라운드하의 이슈별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새로운 통상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방안이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양국간 또는 지역간의 FTA 체결은 지역내 협력관계는 물론 다자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형성·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특수한 사정을 배려한 보다 신축적인 규범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JETRO(2001)는 자유무역협정이 다자체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이 오히려 다자체제의 관찰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주도로 농업과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가 포함된 NAFTA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과 서비스 분야가 다자체제로 포함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이 원하는 규범을 국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일본은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무역협정이 일반화된 추세에서 소외되기보다는 지역무역

협정의 체결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 보다 친숙한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해 일본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NAFTA의 회원국이며, EU, EFTA,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일본기업들은 FTA 체결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경쟁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FTA 및 양자간투자협정(BIT) 체결로 역내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각국의 자본과 선진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상을 전개하면서 일본의 국내제도와 외국 사례를 비교·분석함에 따라 일본의 공공부문에 대한 제도개혁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국가와의 FTA를 고려하게 된 점도 밝히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FTA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일본측 관계자들은 일본이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핵심 고부가가치 위주의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작업을 조기에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3.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한국과 일본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지역주의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며, FTA 체결로 통상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FTA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목표일 뿐, 한·일간 FTA를 추진해야 할 논리적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한·일 양국간 FTA는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정치적, 역사적 장애요인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FTA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및 일본 기업간 경쟁관계의 해소와 전략적 제휴의 확대, 중국의 浮上에 대한 공동 대

비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준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FTA는 다른 어떤 거대경제권과의 FTA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나라의 총수출을 가장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FTA의 대상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과의 FTA는 대일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수지가 비록 악화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일본과의 FTA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회비용이 아주 클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일본의 제조업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중복투자, 수출가의 경쟁적 인하 등으로 양국 기업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가 체결되면 양국 기업들 간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한국보다는 대만,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즉, FTA를 체결하지 않고도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상대국의 입장이다. FTA는 상대가 있는 만큼 상대국의 체결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은 한국을 가장 적절한 FTA 상대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과의 과열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일본경제에서 탈피하고, 향후 소자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쑤시개에서 인공위성까지 생산하는 현재의 풀셋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하는 산업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산업의 상당 부분을 협력국가로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상대국이 우리와 FTA 체결을 절실히 원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넷째, 한·일 FTA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장차 미국, 중국, ASEAN 등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FTA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양국간 FTA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면, 중국과 미국은 동북아에서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이후 동아시아 FTA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동북아에서 한·일 FTA를 우선 체결하고, 이를 동남아의 AFTA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한·일 FTA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교역국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고려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Fukagawa(2000)는 한·일 FTA로 양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하면서, 일본의 FTA 대상국으로 한국이 매우 적합한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으로는 첫째, 한국은 규모의 경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등 높은 동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일본과의 무역자유화가 시행되므로 무모한 중복투자 관행을 줄일 수 있다. 셋째, FTA하의 금융협력이 강화됨으로써 한국은 엔화 자금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 넷째,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이익으로는 첫째, 일본의 각종 자산-금융자산, 기술자산, 기타 생산 노하우 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FTA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이 이들 자산을 무난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국가이다. 즉, 일본의 풀셋 경제를 균형잡힌 제조/투자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나은 대상국이라는 것이다. 둘째, 일본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경제의 구조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 즉, 조만간 노동인력 부족현상에 직면할 일본은 현재의 생산기술을 다른 국가에게 이전하고, 일본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기업의 하이테크를 저비용으로 흡수하여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산업구조 개편에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발생했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social energy)와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했던 경제개혁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FTA는 일본이 결여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기

(momentum)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되, 한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 각 부문에 충격을 줌으로써 일본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일본 경제부처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몇 년 사이 지역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수출비중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 몇 년간 보였던 한·일 양국의 대세계 교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교역비중이 감소한 것에 대해 양국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양국 주력산업의 중첩·과잉투자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국 기업들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더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시장에서의 이러한 경쟁관계는 <표 2>의 수출유사성지수¹⁾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수출유사성지수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상품을 빠르게 대체하지 못하고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점점 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경쟁관계에서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추격을 당하고 있는 二重苦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미국시장에서의 수출유사성지수

	1995	1997	1999
한국과 일본	0.61	0.62	0.62
한국과 중국	0.51	0.50	0.56
한국과 대만	0.71	0.73	0.74

주: SITC 2단위 통계 이용

자료: 박순찬(2001), 「한국 수출경쟁력의 변화 및 요인 분석」, 2001.

한국과 일본의 주력시장인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²⁾를 통

1)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양국간의 특정시장에서의 경쟁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수출상품구조는 이질적이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하여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음.

2)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을 쉽게

해 산업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제품의 경우 2000년 현재 반도체, 컴퓨터, 승용차, 철강제품, 직물, 악기, 고무제품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5년 대비 비교우위 개선품목으로는 컴퓨터, 승용차, 일반기계, 화학제품, 철강제품, 직물, 고무제품을, 1995년 대비 비교우위 악화 품목으로는 반도체, 의류, 가죽제품, 악기, 플라스틱, 신발 등을 들 수 있다.

<표 3> 한국의 품목별 RCA 지수 추이

중화학	전자전기	(반도체)	(컴퓨터)	수송기계	(승용차)	일반기계	정밀기기	화학제품	철강제품
1995	2.55	5.57	2.10	0.52	0.79	0.37	0.37	0.21	1.36
2000	2.45	4.73	2.66	0.89	1.33	0.63	0.31	0.24	1.58
경공업	섬유제품	(의류)	(직물)	가죽제품	악기	플라스틱	고무제품	신 발	완 구
1995	1.59	1.41	3.12	1.77	4.91	0.87	1.06	1.31	0.52
2000	1.32	1.15	3.17	0.82	3.41	0.77	1.31	0.28	0.37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미국무역통계

또한 일본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보면 금년 상반기 현재 반도체, 컴퓨터, 승용차, 일반기계, 정밀기기, 악기, 고무제품, 완구 등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5년과 비교하여 보면 비교우위 개선품목으로는 승용차, 일반기계, 악기, 고무제품, 완구 등이 있으며, 또한 비교우위 악화품목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등을 들 수 있다.

<표 4> 일본의 품목별 RCA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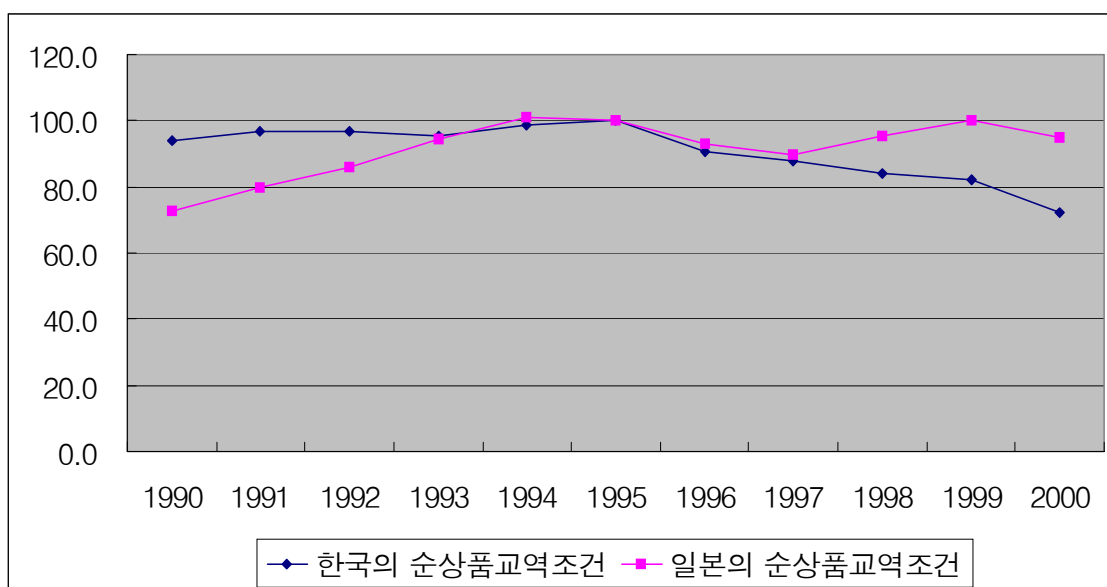
중화학	전자전기	(반도체)	(컴퓨터)	수송기계	(승용차)	일반기계	정밀기기	화학제품	철강제품
1995	1.55	1.63	1.58	1.77	2.03	1.68	2.07	0.86	0.77
2000	1.39	1.47	1.36	1.98	2.44	1.86	1.95	0.88	0.66
경공업	섬유제품	(의류)	(직물)	가죽제품	악기	플라스틱	고무제품	신 발	완 구
1995	0.08	0.01	0.40	0.01	1.89	0.74	1.08	0.00	0.64
2000	0.08	0.01	0.40	0.01	2.30	0.75	1.44	0.00	1.03

자료: KOTIS 일본무역통계, 미국무역통계

비교할 수 있도록 특정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점유율을 각국의 특정국에 대한 총수출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한 지수로 특정 수출품목의 RCA지수가 1보다 큰 값을 지니면 당해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일본과의 경쟁관계가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즉, 한국의 수출구조가 기계류, 반도체, 전기·전자 등 소수 품목에 대한 비중이 높아 국제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의 RCA 지수와 일본과의 수출유사성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과의 경합관계와 후발개도국들과 격화되는 경쟁관계가 한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순상품교역조건(1995=100)



주: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나타내며, 수출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변동을 나타내는 수입단가지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IMF(2001),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국무역협회(2001), 「주요무역동향지표」.

지난 수십년간 양국의 업계와 관련 부처가 한·일 기업의 중복 및 과잉투자 문제를 해소하여 해외시장에서 양국 기업들의 경쟁을 회피하자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양국의 수출유사성지수, 주요 산업에 대한 RCA 지수의 변화 추이, 교역조건변동의 변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없이 기업간 협력만으로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경쟁완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FTA하에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물론이고, 경쟁정책, 산업정책 등 기업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양국이 FTA 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서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부상하자 이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그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위상이 변모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지역, 더 나아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정치적 판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일 양국이 FTA 체결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인교(200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은 10여년에 걸친 경기침체와 해외개발원조(ODA) 자금의 삭감 등으로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누려온 우월적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자,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에서는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에서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한·일 FTA는 의미가 큰데, 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FTA를 논의하면서 이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엔 국제화의 추진과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설치를 추진했으나, 중국, 미국, EU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한·중·일 동북아 FTA와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FTA를 우선 타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FTA와 동아시아 FTA를 달성하는 방안이 양국에는 가장 바람직한 추진방안이 될 수 있다.³⁾ 마지막으로 한·일 FTA가 타결되면,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정치적, 역사적 불신을 상당 수준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최근 한중일 3국간에는 철강 등 산업분야별 3국간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별 협력은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FTA와 같은 다자체제와 정합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없이 해당품목에 대해 3국간에만 특혜관세를 상호제공하는 것은 다자규범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Ⅲ. 기존 한·일 FTA 연구결과 및 문제점

1. 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원은 1999~2000년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양국간 호혜적 관세철폐는 한국의 후생수준과 對일본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② 또한 한국의 중화학공업 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한국의 산업구조가 악화될 전망이다. ③ 그러나 양국간 FTA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산업구조와 對세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한편,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는 본원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양국간 관세철폐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본원의 연구에서는 후생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KIET와 아지겐의 연구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DP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KIET, BDS(Brown, Deardorff and Stern, 2000)는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지겐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對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발표된 공통된 결과이다.

<표 5> 한·일간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정태적 모형)

		KIEP	KIET	IDE	BDS
한 국	후생수준(%)	-0.19	0.48	0.34	-
	GDP(%)	-0.07	-0.07	0.06	-0.23
	대일 무역수지(억\$)	-60.90	-33.60	-38.85	-
	대세계 무역수지(억\$)	-15.43	-6.90	-2.7	-
일 본	후생수준(%)	0.14	-	0.03	-
	GDP(%)	0.04	-	0.00	0.18
	대일 무역수지(억\$)	60.90	-	38.85	-
	대세계 무역수지(억\$)	-	-	54.79	-

여기서는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모형의 설계, 실험 방식, 무역자유화의 충격(shock) 설정, 사용된 데이터 등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모형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KIEP, 아지켄, BDS의 연구들은 전세계를 포함하는 多국가-多부문 CGE 모형을 사용하는 반면, KIET의 연구는 한국만 고려한 단일국가 모형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전세계 모형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생산구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KIEP와 BDS의 모형은 생산구조의 최상부에 레온티에프식 고정투입계수구조를 가정한 반면, 아지켄의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CES 생산함수를 정의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무역자유화 대상과 데이터베이스도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지켄과 BDS의 연구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관세 철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KIEP의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관세철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KIEP, 아지켄, BDS는 기준연도가 1995년인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데이터베이스 제4판을 사용하고 있으나,⁴⁾ 一國모형을 사용한 KIET의 연구진은 1995년도 한국의 투입산출(IO) 표와 교역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한편, 자본이동에 대한 가정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KIEP와 BDS 연구에서는 전세계 자본량이 변동할 경우, 변동된 자본량은 기준년도의 배분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전 지역에 배분되는 불완전배분방식을 가정한 반면, 아지켄의 연구는 자본수익률에 따라 자본변동량이 단기간에 지역별로 배분되는 완전배분방식을 사용하였다.

생산함수 및 자본이동에 대한 가정 등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의 차이가 모형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의 모형을 사용하면서 이들 요소들 중 하나를 변경시키고, 그 결과를 비교하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각각 다른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KIEP 연구에 사용된 모형을 중심으로 추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아지켄의 연구와 같이 자본의 완전배분방식을 사용하면, 추정결과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즉, 한·일 FTA하에서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불완전배분방식에 비해 완전배분방식하에서 외국자본이 신속하

4) GTAP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Hertel(1998, 2001) 참조.

게 더 많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후생 및 소득 수준이 더 높게 추정된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유화의 고려는 한·일 FTA하에서 한국에 대한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본이 연구자료로 사용한 서비스분야 관세율은 한국이 0.32%인데 비해, 일본의 관세율은 3.23%로 높기 때문에 주요 제조업에서와는 달리 관세면에서 한국이 유리할 것임을 알 수 있다.⁵⁾

참고로 한·일간 FTA에서 생산성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KIEP와 아지겐의 연구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양국간 FTA 체결이 가져다 줄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면, 한국의 후생수준은 7~11% 증가하고, GDP는 3~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추정치의 크기 면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KIEP의 연구에서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관세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對한국 투자가 매년 25~35억 달러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에 일본 아지겐 연구진은 산업에 따라 한국의 생산성이 10년 동안 총 10~30%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⁶⁾ KIEP가 가정한 25~35억 달러 추정치는 과거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와 일본의 대세계 투자 규모 등 여러 통계와, 외국인직접투자 패턴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였고,⁷⁾ 아지겐의 연구진은 10~30%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추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들 추정치에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5) IDE 연구에 사용된 산업별 관세율에 대해서는 Nakajima and Kwon(2001) 참조.

6) IDE가 가정한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은 섬유 및 의류, 기타 제조업, 서비스업종이 10년 동안 총 10% 증가하고, 금속, 수송장비(부품 포함), 전기·전자, 기계류 등 중화학공업은 30%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7)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예상치를 30억 달러로 추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경제연구소(2000) p.45를 참조할 것.

<표 6> 한·일간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생산성 향상 효과)

		KIEP	IDE	비 고
한 국	후생수준(%)	11.43	7.09	- 10년 동안 연 1% 제조 업 생산성 향상
	GDP(%)	2.88	8.67	
	대일 무역수지(억\$)	-4.40	-24.60	
	대세계 무역수지(억\$)	30.14	408.00	
일 본	후생수준(%)	-	9.29	- 10% 생산성 향상: 섬유, 기타 제조업, 서비스
	GDP(%)	-	10.44	
	대일 무역수지(억\$)	-	24.60	- 30% 생산성 향상: 금속, 수송장비, 전자, 기계류
	대세계 무역수지(억\$)	-	182.00	

한편, KIEP와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동태적 모형을 사용하여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대체로 그 결과는 유사하게 도출되었다.⁸⁾ KIEP의 연구는 추정기간을 FTA 체결 후 20년으로 설정한 반면, KERI의 연구에서는 KIEP의 연구보다 짧은 10년으로 설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대세계 무역수지에 대한 추정치를 제외하고는, GDP, 투자, 수출과 수입에서 동일한 방향(+)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KIEP의 연구가 제시하는 추정치가 KERI의 추정치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시뮬레이션 모형과 관련이 있는데, KIEP의 연구는 생산성의 변동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多국가 CGE 모형을 사용한 반면,⁹⁾ KERI의 연구는 지역별로 연관된 투입-산출 모형(linked IO Model)인 양자간 무역분석모형(BTM: Bilateral Trade Model)을 사용하였다.¹⁰⁾ 여기서 산업연관모형은 수요 및 생산에서 고정계수를 가정하고 있어, 정책을 변동시킬 때 그 파급효과가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일 2개국간 모형이기 때문에 제3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8)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연구결과는 권영민(2000)에 제시되어 있음.

9) 생산성 증가 효과를 고려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GDP의 증가는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동태적 분석모형이 생산성 증가를 내생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임(정태적 분석에서는 생산성 증가를 FDI의 증가, 즉 생산성 증가를 외생적으로 처리하였음).

10) BTM은 INFORUM(Interindustry Forecasting Project at University of Maryland)이 개발한 무역분석 모형임. 이에 대해서는 Ma(1995) 참조.

<표 7> 한·일간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동태적효과)

	연구기관	1~5년	5~10년	10~15년	15~20년
GDP	KIEP	0.28	0.95	0.40	-0.14
	KERI	0.30	0.18	-	-
투자	KIEP	0.43	1.54	0.56	0.37
	KERI	0.49	0.09	-	-
수출	KIEP	0.07	1.11	2.01	0.23
	KERI	0.93	0.67	-	-
수입	KIEP	1.93	0.77	-0.70	-0.38
	KERI	0.43	0.28	-	-
대세계 무역수지	KIEP	-46.11	-16.92	81.87	37.26
	KERI	4.5	4.4	-	-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 중 다수는 본원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반면, 아지켄의 연구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의 차이는 주로 모형의 특성, 분석범위와 시물레이션 충격(shock)의 차이, 국제자본 부문에 대한 가정 설정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의 설정에 있어 모형내 지역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가 동일한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은 모형내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모수(파라미터)를 사용한 결과, 개별 경제의 특성이 모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철강에 대한 국산재와 수입재간 가격탄력성(일명 아밍턴 계수) 2.8을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모형에서 분류된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철강과 수입철강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시물레이션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모형내 모든 지역 경제의 특성을 모형화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국의 경제적인 특성만이라도 반영된 모형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시뮬레이션 충격으로 사용한 관세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존연구들은 GTAP 데이터베이스의 관세율을 기초로 양국간 관세철폐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비관세장벽 및 서비스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지겐의 연구와 Brown, Deardorff and Stern(2001)의 연구는 서비스분야의 자유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결과만을 간단히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GTAP 데이터베이스의 관세율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시뮬레이션 추정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특히 농업에 대한 GTAP 실행관세율을 해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청된다. 해당품목에 대한 총교역에서 양국간 교역비중이 아주 낮은 경우, 단순히 품목별 관세수입을 총수입으로 나누어서 실행관세율을 계산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충격으로 사용되는 관세율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 즉, 한 산업내 여러 세부품목 중 관세율이 높은 일부 품목만을 특정국가로부터 수입한 경우, 그 국가에 대한 평균실행관세율이 전반적인 관세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관세율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경우, 해당 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모형설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바, 기존연구들은 완전경쟁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경쟁모형은 규모의 경제, 경쟁촉진 등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며, 그 결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추정하게 된다. 특히 한·일 양국의 주력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가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저축률과 자본량이 외생화됨으로써 자본축적의 효과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일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는 방향성에 관계없이 미미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즉, 기존 연구에서 분석이 미비했던 농업관세, 서비스교역장벽,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한 규모의 경제 및 자본축적효과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상 개선사항은 정인교(2001b)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IV. 경제적 효과의 추정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일반균형시물레이션(CGE) 모형은 정책변동의 효과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¹⁾ 무역자유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분균형접근으로는 그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일반균형모형은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경제주체별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GDP, 물가, 무역수지 등 거시변수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

보통 多국가 CGE 모형은 모형내 여러 지역이 동일한 모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를 한국, 일본,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고 모형을 설정할 경우, 각 지역 소비자의 가격탄력성, 생산자의 생산구조(보통 규모불변)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소비패턴, 산업별 생산요소 투입계수, 수출입 패턴 등에 대해 현실적인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각 지역경제는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다. 각 지역별 경제특성을 모형화할 때, 프로그래밍 작업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물레이션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방식을 특징 짓는 파라미터는 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계량작업을 거쳐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파라미터를 모형에 반영하기 어렵다. CGE 모형을 이용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로 GTAP의 파라미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을 사용하여 양국간 FTA 체결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FTA 체결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완전경쟁모형, 규모의 경쟁과 자본축적효과가 반영된 모형 등 3가지를 사용하였다.

11) 기본모형에 대한 설명, 규모의 경제 및 자본축적의 효과 추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인교(2001b) 참조.

<표 8> 시뮬레이션 디자인 및 기호

사용된 파라미터	GTAP 파라미터			
규모의 경제 여부	규모불변		규모의 경제	
분석기간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기 호	GCS	GCL	GSS	GSL

<표 8>에서 맨 아래 항목은 각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기호를 의미하며, 첫 글자는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GTAP 파라메트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가운데 글자 C와 S는 규모불변모형과 규모의 경제모형임을 뜻하고, 마지막 글자 S와 L은 각각 단기적으로 추정한 효과, 중장기적으로 추정한 효과를 의미한다.¹²⁾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디자인에 있어 단기적 효과란 단지 무역장벽의 완화로 인한 정태적인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장기적 효과는 여기에다가 자본축적이 고려됨으로써 한 국가의 산업생산능력이 제고되는 효과까지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Francois, McDonald and Nordstrom(1997), Grossman and Helpman(1991, 1995), Baldwin and Venables(1995), Francois and Roland-Holst(1997) 등은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때 무역자유화가 자본축적에 유리하게 작용, 자본축적을 더 가속화하는 요인들을 반영하였다. 즉,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통상관련 제도나 규범들이 개선되고 투명화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장기적 효과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의 충격은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같은 무역자유화조치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FTA 체결은 통상규범까지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복합적인 효과(관련분야 문헌에서는 자본 우호적인(capital friendly) 효과 혹은 중장기 보너스효과 등으로 불림)를 자본축적과 이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CGE 모형을 구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며, 특히 모형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다국가 CGE 모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산

12) 단기 및 중장기 효과 추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V장 2절 참조. 여기서 ‘중장기’라 함은 FTA하의 시장개방 조치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시점(통상 협정이행후 10년후)을 말하며, ‘단기’는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업 및 국가별 생산과 교역통계와 함께 해당지역의 투입-산출표(I-O table)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GTAP 등 CGE 모형을 개발하는 전문기관들은 모형화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업적 베이스로 판매하고 있다. 본 연구는 Hertel 등(2001)이 발표한 GTAP 제5판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2. 시뮬레이션 충격(shock)의 설정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동을 외생변수의 형태로 나타내야 하며, 이를 ‘모형에 대한 충격(shock)’으로 부른다. 완전균형이 달성되어 있는 모형체계에 외생적 충격을 가해, 모형이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변수에 대한 양 균형점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정책변동의 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모형작성 외에도 시뮬레이션 충격을 디자인하는 자체도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중요한 작업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거되거나 혹은 완화될 무역장벽의 크기가 정의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별, 품목별 관세율은 GTAP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사용하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상의 관세율을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 품목은 수입쿼터 적용대상 품목이고,¹³⁾ 양국의 총수입액에 비해 양국간 교역규모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세부품목들을 한 개의 품목산업으로 그룹화(aggregation)하기 때문에 이 품목들의 평균실행관세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對일본 수입액은 매우 작고, 이에 대해서는 쿼터내물량(in-quota)에 적용되는 저율관세가 부과되었다.¹⁴⁾

13) 수입쿼터 적용품목의 경우, 쿼터내물량(in-quota)과 쿼터외물량(out-quota)간 관세율 차이가 매우 큼. 예를 들어, 2001년 현재 팥콩용 옥수수(HS 1005902000)의 경우, 시장접근내 물량은 6,102,100톤(사료용 옥수수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물량한도내의 수입량에 대한 관세율은 2.2%이나, 이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644%를 부과함.

14) GTAP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국가별 관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지역별, 해당품목별 관세수입을 해당지역으로부터 수입한 해당품목의 총수입액으로 나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한편, 일본은 對한국 곡물에 대해 397%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밀, 옥수수 등 일본이 다른 국가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품목(대부분 저관세 품목임)보다는 일부 고관세 품목만을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도 일본의 곡물류 총수입액은 105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총수입의 0.1% 수준인 1,400만 달러에 불과하여, GTAP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하는 397%의 관세율을 사용할 경우, 시뮬레이션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¹⁵⁾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실행세율은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수입에 대한 평균실행관세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른 품목에 대한 GTAP 관세율은 대세계 관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 8%를 부과하고, 북미와 EU에 대해서는 8.4~8.5%, 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동남아와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7.7~7.9%를 부과하고 있다.¹⁶⁾ 지역별 수입패턴의 특성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GTAP 관세율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과 일본의 기초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각각 김남두(1996)와 Suzanami 외(1995)가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석년도가 각각 1992년과 1989년이므로 현재의 비관세장벽 수준이 10여 년 전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하 농업분야의 개방과 개혁조치로 인해 현재의 비관세장벽 수준은 김남두(1996)와 Suzanami 외(1995)에서 제시된 추정치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이 제시한 비관세장벽의 50%만이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장벽의 대부분이 양국간 FTA 체결시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임산물과 수산물의 비관세장벽 수준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장벽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음.

15) 지난 1999년과 2000년 한일 FTA 연구에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상의 관세율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양국간 FTA 체결시 한국의 생산자원이 농업 등 기초산업분야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후생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16)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은 지역별로 다름. 이러한 차이는 품목내 관세율이 서로 다른 여러 세부품목 중에서 주로 수입하는 세부품목의 비중이 지역별로 다르고, 국내에서의 관세환급의 정도가 세부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임.

앞의 PECC(2000)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은 일본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그러나 일본의 경우 품목에 따라 상당 수준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2001)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과 주요 교역국간 내외가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가격차는 일본산 제품과 다른 국가 제품간 품질차이, 소득격차,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양국간 FTA 체결시 이들 비관세장벽의 일부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비관세장벽이 어느 정도로 제거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겠으나, 이에 대한 문헌을 찾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가격차의 10%만이 FTA 체결로 해소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최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므로, 한·일간에도 서비스분야 자유화가 핵심쟁점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서비스부문에 대한 관세장벽은 거의 없으나, 비관세장벽이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일본보다는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무역 및 운송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 FTA가 서비스분야를 포함시키더라도 모든 비관세장벽이 제거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여기서는 50%만이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가정한 비관세장벽 수준은 저자가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정한 값이지만,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관세장벽 추정치가 계산된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7)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매우 낮다고 해서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전혀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임.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일본에 비해서는 비관세장벽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표 9> 한·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¹⁾

(단위: %, 백만 달러)

산업부문	한 국			일 본			양국 교역 ²⁾	
	관세	NTB	전체	관세	NTB	전체	규모	비중
1. 곡물	201.3	244.9	446.3	111.4	328.7	440.1	15	0.09
2. 원료농산물	82.8	149.2	232.0	43.8	136.3	180.1	171	1.04
3. 축산물	15.8	44.8	60.6	45.6	105.5	151.1	432	2.81
4. 임산물	2.3	-	2.3	4.7	-	4.7	4	0.09
5. 수산물	11.7	-	11.7	6.8	-	6.8	419	15.04
6. 광물자원	2.6	-	2.6	0.0	20.1	20.1	62	0.09
7. 가공식품	45.5	-	45.5	37.3	17.6	54.9	1,754	4.35
8. 섬유	8.0	-	8.0	9.1	15.3	24.4	1,482	9.54
9. 의류·피혁	7.2	-	7.2	13.3	15.5	28.8	1,114	4.67
10. 석유화학	7.7	-	7.7	3.0	16.0	19.0	7,598	13.95
11. 금속	7.3	-	7.3	3.0	13.5	16.5	6,271	15.28
12. 승용차·부품	8.0	-	8.0	0.0	18.8	18.8	816	5.54
13. 기타 수송장비	2.8	-	2.8	0.0	18.8	18.8	153	1.61
14. 전기·전자	8.0	-	8.0	0.0	13.0	13.0	9,200	15.21
15. 기계장비	7.9	-	7.9	0.2	26.4	26.6	13,323	20.05
16. 기타 제조업	7.2	-	7.2	1.8	16.0	17.8	2,526	5.78
17. 건설	0.0	8	8	0.0	2.5	2.5	4	0.06
18. 무역·운송	0.0	47	47	0.0	27.6	27.6	1,604	2.52
19. 금융	0.0	12.2	12.2	0.0	8.8	8.8	161	1.58
20. 기타 서비스	0.3	20.3	20.6	0.0	15.6	15.6	614	1.44
전 산업							47,720	7.68

주: 1)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계산근거는 정인교(2001b),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참조.

2) 교역규모는 해당품목의 양국간 교역액(단위: 백만 달러)이며, 비중은 해당품목에 대한 양국의 대세계 수입액 중 양국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단위: %)임.

3. 시뮬레이션 결과

가. 양국간 상호 관세철폐

<표 10>은 한·일 양국간 관세철폐가 한국의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¹⁸⁾ 규모의 경제, 자본축적효과 및 한국적 파라미터들이 추가

18)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있으나, 모형 자체가 한국경제 위주

된 새로운 모형으로 추정한 금년도 연구결과는 지난해 연구결과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GDP에 대해 살펴보면, 2000년도 연구의 추정치와는 달리 양국간 FTA 체결시 한국의 GDP 수준은 개선될 전망이다, 그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GDP가 0.22~0.33%포인트 추가되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0.82~1.90%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⁹⁾

또한 규모의 경제가 모형화될 때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불변의 모형에서는 GDP 증가율이 0.82%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규모의 경제가 포함되면 규모불변의 모형을 사용했을 때의 추정치보다 2배 이상 높은 1.90%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0> 관세철폐의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

(단위: %포인트, 억 달러)

	2000년도 추정치	GTAP 파라미터			
		규모불변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시나리오 명칭		GCS	GCL	GSS	GSL
실질GDP	-0.07	0.22	0.82	0.30	1.90
물가	0.71	0.37	-0.31	0.23	-0.46
후생수준	-0.19	0.28	0.44	0.33	1.31
등가변환 ¹⁾	-7.66	1.10	1.7	1.3	5.1
저축	-	0.68	3.06	0.60	7.91
자본량	-	0.13	1.38	0.12	2.50
교역조건	-	0.03	-0.46	-0.01	-0.76
△무역수지 ¹⁾	-15.34	-1.00	2.3	-1.0	6.4

주: 1) 등가변환과 대세계 무역수지변동액의 단위는 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포인트 변동률임.

규모의 경제하에서는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그 결과 생산자가격과 수출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악화폭이 규모불변모형의 추정치보다 더 커지게 된다. GTAP 파라미터와 규모의 경제모형

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을 보고하지 않음.

19) 본 보고서의 제IV장에 제시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퍼센티지(%)포인트 변동을 의미함.

을 사용할 경우, 한국의 교역조건은 중장기적으로 최고 0.76%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DP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물가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자본축적이 고려되지 않고 저축률이 고정되는 것으로 정의된 단기적인 상황인 경우 물가인상폭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활성화변수가 내생화된, 즉, 경제주체가 투자수익률과 시간할인률(rate of time discount)에 따라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축률을 결정하는 중장기적인 경우의 총수요는 단기적인 경우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표 10>에서 보듯이, 중장기 효과를 추정하는 시뮬레이션에서는 물가수준이 단기보다 낮게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FTA 체결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최고 0.46%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저축활성화변수가 내생화됨에 따라 저축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경우 장기적 효과 추정시 저축률은 무려 7.91% 증가하고, 이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 물가수준이 0.31% 하락하게 된다.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억 달러 내외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GTAP 파라미터를 사용할 경우, 탄력성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주체들이 가격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에 따라 무역수지의 변동폭이 한국적 모형을 사용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두 가지 파라미터셋 모두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고려되면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이로 인해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은 최고 6억 4천만 달러까지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FTA 체결로 한국의 후생수준은 소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DP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후생수준을 더 큰 폭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의 경제가 고려되면 중장기적으로 후생수준의 개선폭이 단기적인 경우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1억 3~4천만 달러의 후생수준이 개선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5억 달러 내외로 후생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

거시변수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산업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일반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비관세장벽의 완화도 관세장벽에서와 같이 GDP를 상당 수준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의 경제모형(시나리오 GSL)을 이용하면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한국은 최고 2%의 추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불변모형에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최고 0.46%포인트의 추가적인 GDP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규모의 경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2.01% 포인트의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표 11> 비관세장벽 완화의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

(단위: %포인트, 억 달러)

	GTAP 파라미터			
	규모불변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치료W시나리오 명칭	GCS	GCL	GSS	GSL
GDP	0.10	0.28	0.13	2.01
물가	1.80	0.04	1.20	-0.34
후생수준	0.94	0.31	0.74	1.58
등가변환 ¹⁾	3.7	1.2	2.8	6.1
저축	1.99	8.85	1.39	16.46
자본량	0.10	0.31	0.09	2.21
교역조건	1.23	0.05	0.88	-0.60
△무역수지 ¹⁾	-0.6	9.0	-0.5	15.4

주: 1) 등가변환과 대세계 무역수지변동의 단위는 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포인트 변동률임.

對일본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철폐되면 물가가 인하될 수 있는 요인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인상될 요인이 병존하고 있으나, 물가인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물가가 다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고려될 경우 물가

가 장기적으로 인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장벽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나리오하에서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장기적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대세계 무역수지는 관세철폐시 추정된 결과와 유사한 변화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소폭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한국의 후생수준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3~4억 달러의 후생수준이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5억 달러 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V.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국과 일본은 지난 5년 동안 양국간 FTA에 대해 연구와 협의를 진행해 오면서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FTA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업계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과의 FTA에 대한 국내의 지지가 약한 편이며, 향후 협상이 진전될수록 한·일 FTA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원로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일 FTA 추진을 경계하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양국간 FTA 협상이 순탄하게 진전되기는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양국간 FTA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과거 역사문제, 일본 지도층의 우경화적인 언행 등 정치사회적 요인이 잔존해 있는 가운데,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관세수준이 월등하게 높고,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 일본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볼 때, 일본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몇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예외 없이 자유화의 대상이 되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완화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와 국내저축의 활성화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

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상당 부분이 충족될 때, 우리나라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여부가 한·일 FTA 협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투자의 유입은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대한 투자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개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 통관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철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특혜원산지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양국의 국내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 FTA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FTA의 가장 큰 수혜그룹인 기업마저 정부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도 낮은 편이다. 향후 협상이 진전되면서 제조업 개방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협상초기부터 노동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일본과의 FTA에 대한 정부의 협상방향, 기대효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인하의 차등적 이행, 초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 사양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시장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상제도 부문을 조화시킴으로써 시장접근 확대조치가 상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부적절한 국제규격 실태를 수시 점검함과 동시에 국제규격 또는 2국간의 공통규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상호인증 협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장벽(TBT)의 실질적 완화 및 투명성 강화를 협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라벨링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양국간 FTA 논의에 쟁점으로 부상되었던 비관세장벽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이 가능한 분야의 발굴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형태의 특혜

원산지규정을 통해 역내 산업내교역을 활성화시키고, 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교역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일간 FTA가 경제적으로도 또 전략적으로 중요하더라도, 양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실지로 이 문제가 양국간 FTA를 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에 역사교과서 문제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양국간 경제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어, 양국은 FTA라는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종합적인 틀을 짜는데 이들 정치사회적 변수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인 갈등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양국 정부는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갈등요인이 반드시 FTA를 논의하는 데 장애요인으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FTA 체결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접근방안이 될 수도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일 양국은 통상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국간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국에 유리한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FTA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과의 FTA 추진목적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고, 일본이 한·일 FTA를 확대하여 중국과 아세안을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은 한·일 FTA의 확대보다는 일본이 별도로 중국 및 아세안과 양자간 FTA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 중국, 아세안과 별도의 FTA를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는 FTA를 통한 경쟁적 지역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및 지역적 안정 유지라는 경제통합의 본래 취지보다

는 다수의 양자간 FTA로 인한 비효율(spaghetti bowl effects)의 발생과 지역적 불안정이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FTA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이고 FTA에서 유리한 일본이 불리한 국가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협상에서 제시해야 하고,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협정이 되도록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이러한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일 FTA 추진의 최대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00. 「한·일간 교역과 관세철폐 효과」. 한·일 FTA와 기업의 미래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경제연구원. 9월.
- 김남두. 1996. 『보호무역의 비용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6-06.
- 김도형. 2003.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한·일 FTA 종합토론회』. KITA·FKI·KIEP 주최 공동심포지움 자료. 서울. 5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경제연구소. 2000.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KIEP·IDE 주최 한·일 공동심포지움 자료. 서울. 5월.
- 박순찬. 2001. 「한국 수출경쟁력의 변화 및 요인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1. 「한·일 자유무역지대 형성과 자본축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 풀 토의자료.
- 산업연구원(KIET). 1999. 『한·일 FTA와 신산업정책 연구』.
- 일본 經濟産業省. 2001. 『對外經濟政策 基本理念』(www.meti.go.jp).
- _____. 2000. 『産業の中間投入に係る内外價格調査』.
- 정인교. 2001a.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시리즈 01-01.
- _____. 2001b.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1-04.
- Baldwin, R.E. and A.J. Venables 199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II, edited by G.M. Grossman and K. Rogoff. Amsterdam: North-Holland/Elsevier.
- Brown, Drusilla K., Alan V. Deardorff and Robert M. Stern. 2000. "CGE Modelling and Analysis of Multilateral and Regional Negotiating Options." forthcoming in Robert M. Stern (ed.). *Issues and Options for US-Japan Trade Polici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rancois, J.F., B. McDonald, and H. Nordström. 1997. "Capital

- Accumulation in Applied Trade Models." In *Applied Methods for Trade Policy Analysis – A Handbook*.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cois, J.F. and David W. Roland-Holst. 1997. "Scale Economies and Imperfect Competition." In *Applied Methods for Trade Policy Analysis – A Handbook*.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kugawa, Y. 2000. "Japan-Korea FTA as a New Initiative in East Asia: Beyond Bitterness". Global Communications Platform from Japan. May.
- Grossman, G.M. and E. Helpman. 1991.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MA: MIT Press.
- Hertel, T., etc. (ed). 1998. *GTAP Database*. Version 4. Purdue University.
- _____, etc. (ed). 2001. *GTAP Database*. Version 5. Purdue University.
- Igawa, Kazuhiro and Bonggil Kim. 2001. "A Note on Possibilities about Japan-Korea Free Trade Area: A Theoretical and Strategic Approach". mimeo, Kobe, Japan: Kobe University.
- JETRO. 2001. "Why a Free Trade Agreement (FTA) Now?" JETRO home page(www.jetro.go.jp).
- KIEP-IDE. 2000. "Toward a Korea-Japan FTA: Assessment and Prospects."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seminar *Towards Closer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Proposal for Formulating a 21st Century Partnership*. Seoul: Shilla Hotel.
- Nakajima, T., and O.K. Kwon. 2001.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Japan-Korea FTA". ERINA Discussion Paper No. 0101e. Niigata, Japan: E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 Suzanami, Yoko, Shujiro Urata and Hiroki Kawai. 1995. *Measuring the Costs of Protection in Japa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y.
- PECC. 2000. *Non-tariff measures in goods and services trade*. Singapore: PECC.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과 과제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 · 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과 과제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서 론
2. 한 · 일 농업구조 비교
3. 농산물 교역구조
4. 한 · 일 농산물 경쟁력 비교
5. 한 · 일 농산물 관세 비교
6. 한국 농업에 대한 한 · 일 FTA의 파급영향
7. 한 · 일 FTA 추진 방향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과제

최 세균(농경연 연구위원)

1. 서 론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한·일 FTA 체결은 농업과 비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밖에 한·일 FTA는 동북아 역내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FTA와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한·일 FTA 추진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하여는 이미 연구된 부분도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여기서는 한·일 농업구조, 농산물 교역구조, 경쟁력, 관세구조 등을 비교, 분석하고 한·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또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대한 시금석이 될 한·일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업부문의 협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한·일 농업구조 비교

농업구조는 나라마다 경제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의 속도 또한 다르다. 양국의 농업구조 변화에 따라 한·일 양국의 농산물 교역구조와 교역량도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농업구조를 비교하고 농업구조의 변화가 농산물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농업구조란 농업의 생산물 구성과 생산 주체의 구성을 지칭하며, 농업구조 변화란 생산물과 생산주체의 성격과 구성의 변화를 말한다. 농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구성의 변화, 노동력의 부문간 배분, 농지의 유동성 등이 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이정환 1998, p18).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산물 생산의 구성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농업 경영체의 성격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먼저 비교하기로 한다.

2.1. 생산물 구성 비교

한국의 농업 여건은 토지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절약적, 자본 집약적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배업 가운데 곡물보다는 채소와 과실이 유리하고 축산업 가운데는 대가축보다는 소가축이 유리하다. 작물재배면적과 가축사육두수로 본 한국의 농업구조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개방이 가속화된 1995년 이후에는 농업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작물 재배는 곡물 위주에서 채소와 과실로 전환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식부면적은 1990~2002년 기간에 241만ha에서 202만ha로 16% 감소하여 경지면적보다 많이 감소하였다(경지면적 감소율 11.7%). 경지면적도 감소하고 있지만 경지 이용률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 곡물 재배면적은 1990년 167만 ha에서 2002년 130만 ha로 3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채소류와 과실류 재배 면적은 각각 7%와 2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재배면적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9%에서 2002년 64%로 감소한 반면,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7%로,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8%로 각각 증가하였다.

곡물 가운데 특히 재배면적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은 맥류와 콩으로 50% 가까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UR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에서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은 미곡의 재배면적은 1995년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대조를 이룬다. 채소류 가운데 재배면적 증가가 두드러지는 품목은 최근 유리온실 등의 보급이 증가한 시설채소와 양파 등이다. 과실류 재배면적 증가 현상은 사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배 재배면적은 1990년 9천ha에서 2002년 2만 5천ha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밖에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의 재배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다른 과수에 비해 공급이 많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과의 재배면적은 1990년 4만 9천ha에서 2002년 2만 6천ha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채소와 과실류의 재배면적도 감소하여 재배업은 UR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산업은 한우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와 중소가축(돼지, 닭 등)의 사육두수 증가 등 급속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한국의 주요 가축 사육두수

는 2002년 1억 1,262만두로 1990년에 비해 40%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육두수의 증가는 주로 돼지, 닭 등 소가축의 사육 증가에 기인한다. 돼지 사육두수는 1990~2002년 기간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닭 사육 수도 37%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우 사육두수는 1995년 260만 두에서 2002년 140만두로 46%나 감소하였다. 젓소 사육두수는 50~55만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1990~2002년 기간에 8%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자원이 자본과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 있어서 대가축보다 중소가축 사육이 유리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젓소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으나 한우 사육두수가 급감한 것은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이라는 충격은 동일하였으나 관세의 차이와 상품의 교역 가능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한국의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

단위 :천 헥타

구 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90-’02)
전체 재배면적	2,409(100.0)	2,197	2,098	2,020(100.0)	-16.1
식량작물	1,669(69.3)	1,347	1,317	1,299(64.3)	-22.2
- 미 곡	1,244(51.6)	1,056	1,072	1,053(52.1)	-15.4
- 맥 류	160(6.6)	90	68	81(4.0)	-49.4
- 콩	188(7.8)	133	107	99(4.9)	-47.3
- 기 타	77(3.2)	68	70	66(3.3)	-14.3
채 소	311(12.9)	403	386	334(16.5)	7.4
- 고 추	63(2.6)	87	74	72(3.6)	14.3
- 마 늘	44(1.8)	40	45	33(1.6)	-25.0
- 양 파	8(0.3)	16	17	15(0.7)	87.5
- 시설채소	35(1.5)	82	91	83(4.1)	137.1
- 기 타	161(6.7)	178	159	131(6.5)	-18.6
과 실	132(5.5)	174	173	166(8.2)	25.8
- 사 과	49(2.0)	50	29	26(1.3)	-46.9
- 배	9(0.4)	16	26	25(1.2)	177.8
- 포 도	15(0.6)	26	29	26(1.3)	73.3
- 복숭아	12(0.5)	10	14	16(0.8)	33.3
- 감 귤	19(0.8)	24	27	26(1.3)	36.8
- 기 타	28(1.2)	48	48	47(2.3)	67.9
뽕밭 등	297(12.3)	273	222	221(10.9)	-25.6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표 2> 한국의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

단위 : 천두, 천수

구 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90-’02)
사육두수	81,117(100.0)	95,408	112,895	112,621(100.0)	39.6
한 우	1,622(2.0)	2,594	1,590	1,410(1.3)	-13.0
젖 소	504(0.6)	553	544	544(0.5)	7.9
돼 지	4,528(5.6)	6,461	8,214	8,974(8.0)	98.2
닭	74,463(91.8)	85,800	102,547	101,693(90.2)	36.6

주 : ()는 구성비를 나타냄, %.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일본의 농업 여건은 토지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형태로 한국과 비슷하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한국이 1.4ha, 일본이 1.6ha이며,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영세농의 비중이 각각 62%와 58%에 달한다. 반면 자본 투입량은 많아 호당 경운기나 트랙터 보유대수는 한국이 0.83대, 일본이 1.0대이며, 농업취업자 1인당 자본투입액인 자본장비율은 한국이 8,500달러, 일본이 9,400달러로 중국(359 달러)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어 명근 외 2003).

일본 농업도 토지 절약적, 자본 집약적 농업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한국에 비해 경작면적 감소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작물 재배면적은 1990~2002년 기간에 9%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한국은 16% 감소). 그러나 일본의 농작물 재배면적 감소는 곡물은 물론 채소와 과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특히 과실류 재배면적은 1990~2002년 기간에 22.3% 감소하여 곡물 재배면적 감소율 20%와 채소 재배면적 감소율 16.5%를 앞질렀다.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휴경을 권장하고 있는 논을 중심으로 사료작물 재배가 장려됨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100만ha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곡물류 가운데 재배면적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품목은 보리와 콩으로 1990~2002년 기간에 25% 이상 감소하였다. 벼 재배면적은 1990년에 207만ha로 전체 작물 재배면적의 40%에 달하였으나 2002년에는 169만ha(전체의 35%)로 감소하였다. 지난 10여년간 벼 재배면적은 40만ha 가까이 감소하였다. 채소류 가운데 재배면적 감소 현상이 현저한 품목은 근채류와 과채류이다. 토마토, 오이, 가지 등 과채류 재배면적은 25% 이상 감소하였다. 과실

류 가운데는 감귤과 포도의 재배면적이 각각 24%와 17%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일본의 축산업 변화는 한국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축 사육두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90~2002 기간에 4.4% 감소하였다. 그러나 육우 사육두수는 오히려 5% 증가하여 1990년 270만 두에서 2002년 284만 두가 되었다. 그러나 젓소, 돼지, 닭 등 기타 가축 사육두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돼지는 1,182만 두에서 879만 두로 26% 감소하였으며 젓소는 206만 두에서 173만 두로 16% 감소하였다. 닭 사육 수도 3% 감소하였다. 한국이 돼지, 닭 등 소가축을 중심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은 소가축의 사육두수 감소가 대가축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3> 일본의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

단위 : 천 헥타

구 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90-'02)
전체 재배면적	5,243(100.0)	5,038	4,830	4,762(100.0)	-9.2
식량작물	2,791(53.2)	2,603	2,340	2,234(46.9)	-20.0
- 미 곡	2,074(39.6)	2,118	1,770	1,688(35.4)	-18.6
- 맥 류	369(7.0)	257	297	272(5.7)	-26.3
- 콩	257(4.9)	156	192	192(4.0)	-25.3
- 기 타	91(1.7)	72	81	82(1.7)	-9.9
채 소	647(12.3)	588	540	540(11.3)	-16.5
- 근채류	84(1.6)	78	68	63(1.3)	-25.0
- 엽채류	119(2.3)	114	107	103(2.2)	-13.4
- 조미채소	53(1.0)	52	52	49(1.0)	-7.5
- 과채류	102(1.9)	90	80	76(1.6)	-25.5
- 기 타	289(5.5)	254	233	249(5.2)	-13.8
- 과 실	346(6.6)	315	286	269(5.6)	-22.3
- 사 과	50(1.0)	48	44	43(0.9)	-14.0
- 배	18(0.3)	18	17	16(0.3)	-11.1
- 포 도	24(0.5)	23	20	20(0.4)	-16.7
- 감	26(0.5)	26	25	25(0.5)	-3.8
- 감 귤	74(1.4)	65	58	56(1.2)	-24.3
- 기 타	154(2.9)	135	122	109(2.3)	-29.2
뽕밭 등	1,459(27.8)	1,532	1,664	1,719(36.1)	17.8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경지 및 식부면적통계」, 2002.

<표 4> 일본의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

단위 : 천 두, 천 수

구 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 (‘90-’02)
전 체	203,989(100.0)	209,020	201,775	195,100(100.0)	-4.4
육 우	2,702(1.3)	2,965	2,823	2,838(1.5)	5.0
젖 소	2,058(1.0)	1,951	1,764	1,726(0.9)	-16.1
돼 지	11,817(5.8)	10,250	9,806	8,790(4.5)	-25.6
닭	187,412(91.9)	193,854	187,382	181,746(93.1)	-3.0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통계」, 각 연도.

2.2. 농가 성격 비교

주어진 가격과 기술 조건 아래서도 생산주체의 성격에 따라 생산성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이정환, 1998). 생산주체의 규모, 소유권, 경영자의 연령 등 생산주체의 성격이 생산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요소(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따른 자작농, 소작농, 임차농 등의 구분은 최근 의미가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농주체의 성격을 규모, 연령 그리고 영농형태(전업농 또는 겸업농 등)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표 5> 한국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 천 호

구 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 (‘90-’02)
농가호수	1,767(100.0)	1,501	1,383	1,280(100.0)	-27.6
1.0ha 이하	1,027(58.1)	865	819	777(60.7)	-24.3
1.0~3.0ha	672(38.0)	541	465	405(31.6)	-39.7
3.0ha 이상	44(2.5)	70	85	78(6.1)	77.3
기타(경종 외)	24(1.4)	25	14	20(1.6)	-16.7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의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990년 1.19ha에서 2002년 1.45로 0.26ha(약 800평)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적인 규모화의 부진 속에서도 3ha 이상의 대농 출현은 크게 증가하여 1990~2002년 기간에 3ha 이상의 농가는 77%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3ha 이상의 대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6.1%로 증가하였다. 영세농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58%에서 61%로 증가하였으나, 중농은 38%에서 32%로 감소하여 영세농과 대농으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농가 가운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의 비중은 1990~2002년 기간에 60%에서 6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가인구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3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농업 생산성 향상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청장년층 인력은 300만명에서 125만명으로 58%나 감소하여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35%로 낮아졌다. 농촌인구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90~2002년 기간에 인구 감소율은 14세 이하 72%, 14~49세 58%, 50대 4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의 인구는 오히려 119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16% 증가하였다. 한국 농업은 전업농에 의한 규모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성 증대 요인과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의 원활한 탈농과 소수 정예 농업 노동력의 확보가 구조조정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6> 한국의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단위 : 천 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 (‘90-’02)
농가인구	6,661(100.0)	4,851	4,031	3,591(100.0)	-46.1
14세 이하	1,370(20.6)	680	459	384(10.7)	-72.0
15~49세	2,993(44.9)	2,049	1,563	1,245(34.7)	-58.4
50~59세	1,111(16.7)	867	676	590(16.4)	-46.9
60세 이상	1,187(17.8)	1,255	1,333	1,372(38.2)	15.6

주 : ()는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일본의 호당 경지면적은 1990년 1.37ha에서 2002년 1.57로 0.2ha(약 600평) 증가하는데 그쳐 한국보다 규모화의 진전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3ha 이상의 대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1990~2002년 기간의 증가율은 한국의 77%에 비해 매우 낮은 2.1%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같은 대농과 영세농으로의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영농의 규모화 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겸업농이 감소하고 전업농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이 일본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농가인구는 1990~2002년 기간에 43% 감소하여 한국의 46%와 비슷한 감소율을 나타냈다. 인구 감소율은 14세 이하 57%, 15~49세 47%, 50대 47%, 60세 이상 26% 등이다. 한국과 비교해 차이가 나는 점은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38%와 37%로 비슷하나, 일본은 50대의 인구 비중이 13%로 한국의 16%에 비해 낮고 청장년층과 어린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농가인구 구조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유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일본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 천 호

구 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 (‘90-’02)
농가호수	3,834(100.0)	3,444	3,121	3,027(100.0)	-21.0
1.0 미만	1,762(46.0)	1,565	1,364	1,305(43.1)	-25.9
1.0~3.0	1,016(26.5)	892	781	747(24.7)	-26.5
3.0 이상	192(5.0)	195	193	196(6.5)	2.1
기타	864(22.5)	792	783	779(25.7)	-9.8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표 8> 일본의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단위 : 천 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 (‘90-’02)
농가인구	17,296(100.0)	15,084	13,458	9,897(100.0)	-42.8
14세 이하	2,988(17.3)	2,205	1,729	1,281(12.9)	-57.1
15~49세	6,907(39.9)	6,033	5,216	3,657(37.0)	-47.1
50~59세	2,478(14.3)	1,861	1,710	1,315(13.3)	-46.9
60세 이상	4,923(28.5)	4,984	4,803	3,644(36.8)	-26.0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2.3. 농업구조 변화로 본 교역 가능성

농작물 재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교역 증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업 내부에서 양국의 호혜적 산업내 무역보다는 한국의 대일본 수출 증대에 따른 교역 증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에서 자급률이 매우 낮은 콩, 보리, 옥수수 등 곡물류의 교역 증대 가능성은 낮으나 양국이 다같이 과잉 생산 상태에 있는 쌀의 산업내 교역 증가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채소와 과실류 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들 품목의 재배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수출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일본의 육우 사육두수 증가, 한국 쇠고기의 낮은 자급률 및 자급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대일본 수출 증대 가능성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에 비해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일본의 생산 감소와 한국의 생산 증가 및 높은 자급률 등을 고려할 때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영농 규모화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대일본 경쟁력 제고 요인이 될 전망이다.

3. 농산물 교역구조

3.1. 한 국

교역구조는 수출입 품목의 구성, 수출입 대상국가의 구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어떠한 농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 또는 수입 시장은 어느 국가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수출입 품목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양국의 산업내 무역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의 농산물 교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 무역수지 규모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84억달러에 달하였다. 외환위기 기간에는 농산물 수입이 급감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 제외) 수출은 지난 10년간(1993~2003)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 부진 등으로 축산물 수출은 감소하였다. 임산물 수출은 석재류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4억 5천만달러에서 1억 8천만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9>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수출	농산물	695	1,087	1,188	1,003	1,252	1,389
	축산물	115	156	320	408	118	105
	임산물	454	505	345	304	210	179
	계	1,263	1,747	1,853	1,715	1,580	1,673
수입	농산물	3,870	5,675	6,285	4,681	5,325	5,536
	축산물	701	1,224	1,324	1,245	1,466	1,925
	임산물	2,698	2,778	2,622	1,533	1,671	1,957
	계	7,269	9,677	10,231	7,459	8,463	9,418
무역수지	농산물	-3,175	-4,588	-5,097	-3,678	-4,073	-4,147
	축산물	-586	-1,069	-1,004	-837	-1,348	-1,820
	임산물	-2,244	-2,274	-2,277	-1,229	-1,461	-1,778
	계	-6,006	-7,930	-8,378	-5,744	-6,883	-7,745

자료: www.kati.net.

3.1.1. 수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과실, 채소, 화훼 등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기호식품 등이다. 화훼류의 수출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증가율은 어떤 품목보다 높다. 채소류 수출은 김치와 과채류 수출의 증가로 지난 10년간 2.3배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주요 수출 품목은 사과, 배, 감귤이며, 채소류는 오이, 토마토, 양파, 가지, 당근, 김치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화훼류의 주요 수출품목은 장미, 백합, 선인장, 난 등이다.

가공식품과 기호식품도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이다. 과자류, 면류, 주류 등은 연간 1억 5천만달러 정도씩 수출되고 있다. 축산물은 1999년 4억달러 이상이 수출되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 감소로 2003년에는 1억달러 수출에 그쳤다.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돼지고기, 김치와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등이며, 가공식품도 중요한 수출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이 주로 소량 다품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력 품목이 없어 수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과실류와 화훼류는 신시장 개척의 한계로 최근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표 10> 품목류별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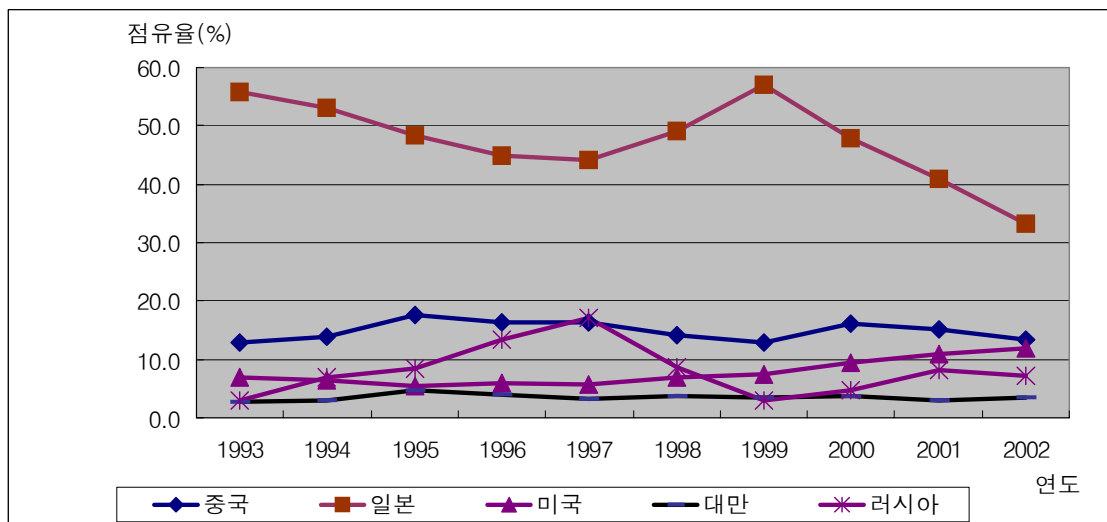
단위 : 백만 US\$

	곡물류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기호식품	축산물	임산물	기타	계
1992	14	36	15	2	362	84	570	287	1,370
1993	17	45	74	4	320	115	454	235	1,264
1994	27	60	79	6	348	116	511	316	1,463
1995	31	60	111	6	445	156	505	433	1,747
1996	35	63	85	4	487	260	405	491	1,829
1997	34	64	78	5	455	320	345	552	1,853
1998	53	39	103	11	411	389	292	384	1,683
1999	49	36	165	20	385	408	304	349	1,715
2000	43	45	186	29	430	144	282	401	1,559
2001	51	56	190	32	501	118	231	422	1,600
2002	47	83	169	32	576	98	180	468	1,653
2003	39	60	174	33	609	105	179	474	1,672

주 : 곡물류는 곡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사료 등을 포함하며, 기호식품은 커피, 코코아, 차, 연초, 인삼, 한약재, 주류, 음료, 당류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 시장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대만 등으로 이들 5개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농산물 수출의 최대 시장이나 전체 수출에서 일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이 수출품과 수출 시장에 있어서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일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56%에서 2002년 33%로 크게 감소하였다(대일본 돼지고기 수출 중단에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돼지고기 문제를 제외하고도 대일본 수출 비중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 반면 중국, 미국, 러시아, 동남아를 비롯한 기타국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국가별 농산물 수출



3.1.2. 수 입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입을 품목군별로 보면, 농산물의 비중이 60%이고 축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20% 수준이다. 임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7%에서 2003년 20%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시장개방 확대에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축산물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0%에서 2003년 20%로 증가하였다. 곡물 수입은 사료곡물 수입 규모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곡물 수입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 40억달러에 달하였으나, 2003년에는 27억달러에 그쳤다. 열대과실을 중심으로 과실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채소류의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US\$

	곡물류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기호식품	축산물	임산물	기타	계
1995	2,933	315	140	27	1,509	1,224	2,778	751	9,677
1996	3,998	323	176	30	1,614	1,240	2,788	770	10,940
1997	3,225	347	180	29	1,650	1,324	2,622	854	10,231
1998	2,617	194	138	10	1,087	756	1,016	617	6,436
1999	2,412	286	175	17	1,034	1,245	1,533	757	7,459
2000	2,528	349	187	19	1,226	1,679	1,744	795	8,527
2001	2,630	354	192	21	1,305	1,467	1,799	823	8,591
2002	2,757	419	195	23	1,387	1,948	2,157	920	9,807
2003	2,672	472	242	20	1,233	1,925	1,957	896	9,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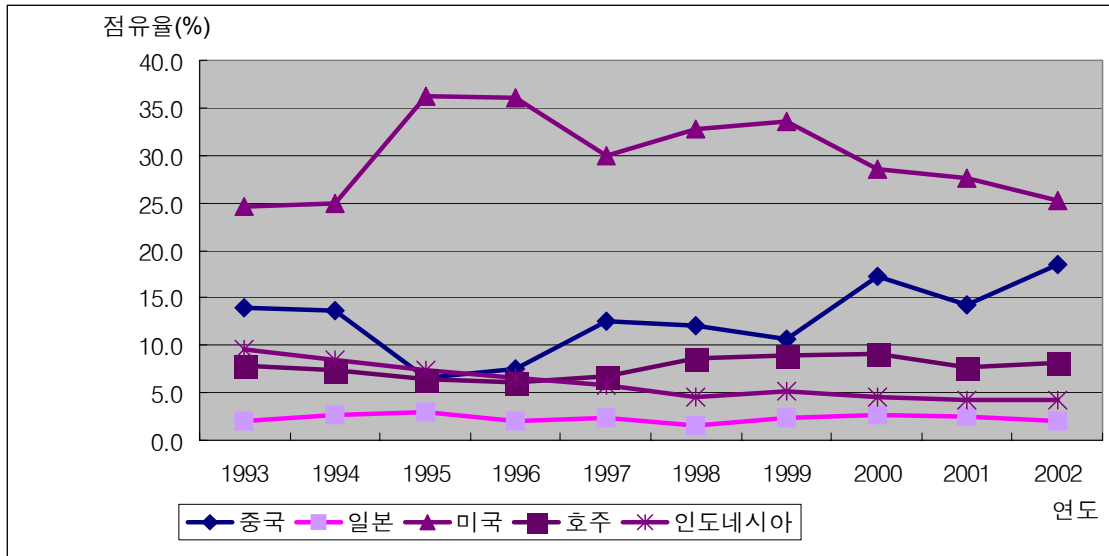
주 : 곡물류는 곡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사료 등을 포함하며, 기호식품은 커피, 코코아, 차, 연초, 인삼, 한약재, 주료, 음료, 당류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수출에 비해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은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지만 수입은 상위 5개국의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국 수출액이 큰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임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상위 5위국에서는 벗어났으나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담배의 수출국인 일본, 사탕수수당과 커피의 수출국인 태국, 대두 및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을 수출하는 브라질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농산물의 최대 공급국은 미국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의 1/4 정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땅콩, 참깨, 팥, 대두박, 한약재 등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는 목재 등 건축용 자재와 팜유가 주로 수입되고 있다.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은 쇠고기, 목재, 사탕수수당 등이다.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1993년 9억 8천만 달러에서 2002년 2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옥수수 수입의 변동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안정적이거나 미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상호 역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료곡물 수입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옥수수 수입선을 어느 국가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그림 2. 한국의 농산물 국가별 수입 현황



3.2. 일 본

일본은 독일과 함께 세계 최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35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은 1990~2001 기간에 30%에서 28%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사료곡물인 옥수수과 밀의 자급률은 매우 낮다. 곡물 가운데 쌀은 과잉 생산으로 생산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타 곡물은 대부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육류의 자급률은 70%에서 53%로 크게 낮아졌으며, 특히 쇠고기 자급률은 3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채소의 자급률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실의 자급률은 44%에 불과하다.

곡물 수입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농산물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육류 수입은 1990~2001 기간에 85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은 20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70% 증가하여 쇠고기 수입 증가율 28%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돼지고기가 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쇠고기보다 높은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채소와 과실류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소 가운데 수입 규모가 큰 품목은 호박, 고추, 양파 등으로 한국의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들이다. 과실류는 주로 일본의 국내 생산이 부족한 열대과일과 키위가 수입되고 있다. 한국이 관심을 가지는 사과, 배, 밀감, 포도 등의 수입 규모는 매우 작다.

일본의 농산물 수출은 수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2001년 농산물 수출 규모는 25억달러이나, 이 가운데 상업적 수출이 아닌 원조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 수출이 1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과일, 채소, 축산물 등의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며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의 증가와 수출 부진으로 일본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3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2> 일본의 농축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수 입	28,941	31,878	38,321	42,637	35,385	36,851	35,376
곡물	4,575	4,681	6,339	6,558	4,766	4,400	4,378
과실	2,216	2,693	2,978	3,101	2,672	3,154	2,895
채소	1,520	1,935	2,831	3,051	2,959	3,171	3,115
축산	8,528	9,585	10,869	12,793	9,345	11,202	10,900
수 출	1,116	1,389	1,601	1,564	1,557	1,564	2,485
곡물	107	119	136	148	277	177	1,095
과실	48	63	49	48	38	41	35
채소	80	65	64	57	40	40	39
축산	189	176	208	125	127	90	115
무역수지	-27,825	-30,488	-36,720	-41,073	-33,828	-35,287	-32,890

주: US 달러당 수출입액은 日本銀行調査統計局「金融經濟統計月報」의 연도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財務省, 「貿易統計」, 각 연도.

<표 13> 일본의 주요 품목별 농산물 수입

단위: 백만달러

	1991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총 계	30,072	32,194	41,661	38,964	35,934	36,851	35,376
곡 물 류	3,896.3	4,007.2	4,473.2	4,900.8	3,825.7	3,741.4	3,696.0
- 쌀	4.9	109.5	22.2	330.8	314.4	264.4	195.7
- 밀	919.3	1,140.5	1,339.7	1,361.4	1,073.4	1,031.0	1,036.9
- 옥 수 수	2,238.9	2,140.5	2,390.5	2,445.3	1,884.4	1,886.8	1,950.3
채 소 류	429.5	610.2	1,005.6	779.7	927.2	945.0	908.8
- 토 마 토	0.0	0.1	1.8	3.3	21.9	26.9	17.2
- 양 파	25.1	29.6	135.2	56.6	65.5	71.9	77.6
- 마 늘	3.5	11.6	12.1	25.2	21.0	20.1	19.8
- 오 이	1.4	1.9	5.9	3.2	8.5	9.6	11.2
- 고 추 류	0.1	2.6	16.7	33.2	46.5	64.4	67.7
- 호 박	80.9	100.3	114.8	100.7	86.7	75.9	87.6
과 실 류	1,654.4	1,733.7	1,942.3	1,792.4	1,915.7	1,969.9	1,752.8
- 오 렌 지	134.4	156.0	184.2	149.1	120.1	104.0	107.7
- 밀 감	0.6	2.5	11.1	8.1	16.8	15.9	17.0
- 포 도	18.5	18.9	24.3	17.8	17.7	26.4	20.4
- 사 과	0.0	0.1	16.2	0.2	0.6	0.9	2.4
- 배	0.0	0.0	0.0	0.0	0.6	0.5	0.8
- 딸 기	26.2	26.2	37.8	34.0	34.6	40.5	38.0
- 키 위	85.6	86.8	84.8	78.8	87.7	114.0	76.7
축 산 물	8,662.3	9,580.9	13,060.9	10,830.5	10,418.3	11,202.2	10,900.4
- 돼지고기	1,990.1	2,566.0	3,714.8	2,691.2	2,858.3	3,222.2	3,382.6
- 쇠 고 기	1,805.6	2,452.1	3,240.1	2,611.5	2,445.5	2,591.0	2,296.2
- 닭 고 기	771.4	760.6	1,317.6	966.5	943.2	840.5	830.8
차 류	138.6	146.0	183.0	195.4	178.4	207.9	209.1
- 차	5.7	12.1	15.6	26.7	29.5	38.9	47.0
- 홍 차	132.9	133.9	167.4	168.7	148.9	169.0	162.2

주: 1) 곡물류 계는 곡분 조제품을 제외한 수치임.

2) 채소류 계는 신선·냉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건조·조제품은 제외한 수치임. 채소류에는 일본의 통계분류상 버섯류, 식용 콩류가 포함되어 있음. 고추류에는 피망이 포함되어 있음.

3) 과실류 계는 신선·건조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제품은 제외한 수치임. 포도·사과·배·딸기는 신선을 대상으로 하였음. 과실류에는 일본의 통계분류상 밤 및 일부 과채류가 포함되어 있음.

4) 축산물 계는 동물, 축산조제품, 낙농품, 계란이 포함된 수치임. 1991~95년의 닭고기 통계치는 가금류 전체의 계임.

5) 차류 계는 차 음료를 제외한 수치임.

6) US 달러당 수입액은 日本銀行調査統計局「金融經濟統計月報」의 연도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國制統計室, 「農林水産物輸入実績(品別)」, 각 연도.

일본의 최대 농림수산물 수입선은 미국으로 2001년 미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26.9%이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 EU, 캐나다, 호주 등으로 곡물과 축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다. 일본 시장에서 이들 5개 주요 수출국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나라는 아시아 지역의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임산물, 열대과실, 채소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농산물에 있어서 일본이 최대 수출시장이지만 한국이 일본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다.

<표 14> 일본의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입

단위: 10억엔, %

국 명	2001		2000		1999	
	수입금액	점유율	수입금액	점유율	수입금액	점유율
미 국	1,937	26.9	1,871	27.1	1,930	27.3
중 국	924	12.8	823	11.9	771	10.9
E U	695	9.6	656	9.5	656	9.3
캐나다	505	7.0	481	7.0	479	6.8
호 주	477	6.6	450	6.5	454	6.4
태 국	354	4.9	318	4.6	319	4.5
인도네시아	303	4.2	298	4.3	316	4.5
러시아	203	2.8	205	3.0	210	3.0
한 국	192	2.7	207	3.0	244	3.5
(수산물 제외)	(76)	-	(82)	-	(118)	-
말레이시아	171	2.4	184	2.7	197	2.8

자료: www.kati.net

3.3. 한 · 일 농산물 교역

3.3.1. 대일본 수출

한국의 대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은 돼지고기와 임산물의 수출 감소로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대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은 1993년 7억달러에서 1999년 9억 4천만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 2002년에

는 5억 9천만달러로 감소하였다. 돼지고기 수출은 1999년에 비해 3억 5천만 달러 감소하였으며 임산물 수출은 6천만달러 감소하였다. 그러나 임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 수출은 1993년 2억 2천만달러에서 2002년 4억 6천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일본 농산물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999년 8억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2년에는 4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표 15>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3	1994	1995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계	703.5	775.2	845.4	823.7	812.3	783.0	944.2	719.7	638.4	590.0
	농산물	223.6	264.1	320.1	293.2	283.7	304.9	408.4	460.8	474.2	459.9
	축산물	106.4	107.1	136.5	240.9	279.0	350.9	373.0	101.0	29.2	26.8
	임산물	373.5	404.0	388.8	289.6	249.6	127.2	162.8	157.9	135.0	103.3
수입	계	150.5	214.2	292.8	234.6	232.2	100.5	165.8	218.5	207.3	202.7
	농산물	114.6	168.7	236.3	162.9	175.5	75.9	124.1	165.1	157.6	152.8
	축산물	12.6	12.1	14.6	14.4	19	14.8	20.9	34.8	38.2	40.5
	임산물	23.3	33.4	41.9	57.3	37.7	9.8	20.8	18.6	11.5	9.4
무역수지		553.0	561.0	552.6	589.1	580.1	682.5	778.4	501.2	431.1	387.3

주: 각 통계추계마다 불일치가 있음.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년도

품목류별로 볼 때 대일 수출이 1억달러 이상인 품목은 채소류(1억 4천만 달러)와 주류(1억달러) 등이다. 그밖에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은 화훼류, 인삼, 과자, 면류 등이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과일, 채소, 화훼, 장류를 포함한 소오스, 과자, 면류 등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이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이 많다. 반면 한약재와 인삼의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대일본 품목류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농산물 전체	223,586	320,107	282,063	408,354	460,862	474,212	459,977
과실류	4,454	6,397	6,059	7,270	8,774	9,444	5,530
식물성액즙	3,015	4,087	3,224	4,878	5,369	3,456	3,830
채소류	55,743	88,274	58,169	147,006	165,430	161,564	140,481
화훼류	932	2,861	2,268	12,365	20,975	24,242	22,909
사료	8,651	9,083	8,300	16,935	8,839	9,454	10,865
빵류제조용	23,454	31,694	30,019	25,033	28,056	26,376	28,528
소오스류	2,252	3,478	3,852	3,466	5,294	6,214	4,886
코코아류	12,594	18,135	22,346	19,961	17,849	19,751	21,722
인삼류	33,254	41,029	26,887	22,002	17,621	27,421	28,011
한약재류	10,875	8,355	4,032	1,051	3,099	3,617	2,367
주류	12,027	35,522	57,955	81,869	105,158	99,822	101,779
당류	6,493	9,327	8,926	6,066	4,682	4,175	9,138
과자류	17,999	22,841	24,307	27,180	35,918	42,139	39,927
면류	4,789	5,016	4,923	9,522	11,499	10,959	12,584
기타조제 농산물	6,111	7,351	5,823	5,638	5,057	6,339	6,064
기타	20,943	26,657	14,973	18,112	17,242	19,239	21,356

자료: www.kati.net.

<표 17> 주요 품목별 대일본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채소류	김치	28,739	43,301	37,648	77,038	76,463	65,028	74,126
	토마토	566	1,462	1,662	16,807	22,231	14,479	6,925
	오이	1,827	5,248	3,072	9,271	9,881	11,409	5,015
	파프리카*	1,214	1,806	3,962	14,232	28,247	36,967	34,209
화훼류	장미	-	26	41	6,492	10,295	10,216	7,112
빵류제조용	빵반죽	23,359	31,689	29,987	25,008	28,049	26,375	28,520
코코아류	코코아분말	11,955	16,858	21,476	18,167	17,047	18,063	17,482
주류	소주	9,651	28,168	52,623	68,070	82,937	87,261	90,109
	기타 곡물 발효주	486	512	278	8,466	18,002	6,686	8,036
과자류	기타설탕과자	13,785	16,361	18,839	22,699	31,367	37,184	31,550

주: *는 고추수출액을 말한다. 고추수출의 90%이상을 파프리카가 점유하고 있고, 고추와 파프리카의 수출액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추수출액 전체를 이용하였다.

자료: www.kati.net.

3.3.2. 대일본 수입

한국의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입 규모는 2002년 2억 300만달러이다. 이는 2002년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입 가운데 농산물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 연간 1천만달러 이상이 수입되는 품목은 간장 등 소오스(1,100만달러), 연초(4,800만달러), 채소(1,300만달러), 사료(1,800만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담배는 1억달러 이상이 수입된 경우도 있으나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채소류 가운데 주로 수입되는 것은 채소종자로 한국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재배한 후 채소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향미용조제품 등이 있다.

<표 18> 품목류별 대일본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채소류	7,550	11,732	12,595	16,466	17,189	14,294	12,826
식물성유지	2,519	6,975	4,194	3,494	3,331	3,630	3,534
유지가공품	1,464	2,504	4,858	5,076	3,874	5,179	4,691
식물성액즙	5,454	9,342	7,135	6,255	7,125	6,765	7,353
사 료	7,605	13,376	11,119	10,533	15,247	15,348	18,361
소오스류	9,237	8,607	9,097	9,491	10,460	9,591	11,333
연초류	37,998	132,632	75,972	40,412	69,386	60,967	47,773
당 류	2,237	3,936	4,229	3,176	5,356	5,181	4,957
과자류	2,673	2,805	3,644	3,123	4,701	6,415	7,493
기타조제농산물	15,725	17,958	13,761	7,387	8,163	9,625	11,812
기 타	22,165	26,422	26,833	18,711	20,304	20,609	22,652
계	114,627	236,289	171,437	124,124	165,136	157,604	152,785

자료: www.kati.net.

4. 한·일 농산물 경쟁력 비교

4.1. 가격경쟁력

한·일 양국의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도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농산물에 있어서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가격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1.7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쇠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실류는 포도, 밀감, 배, 사과 순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높았으며, 과실류 가운데 가격차가 가장 작은 사과의 일본 가격은 한국의 1.23배로 비슷한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채소류도 대부분 한국의 가격이 일본에 비해 낮았으며, 한국이 많이 수출하고 있는 오이와 토마토 가격은 일본이 두 배나 높았다.

<표 19>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도매가격 비교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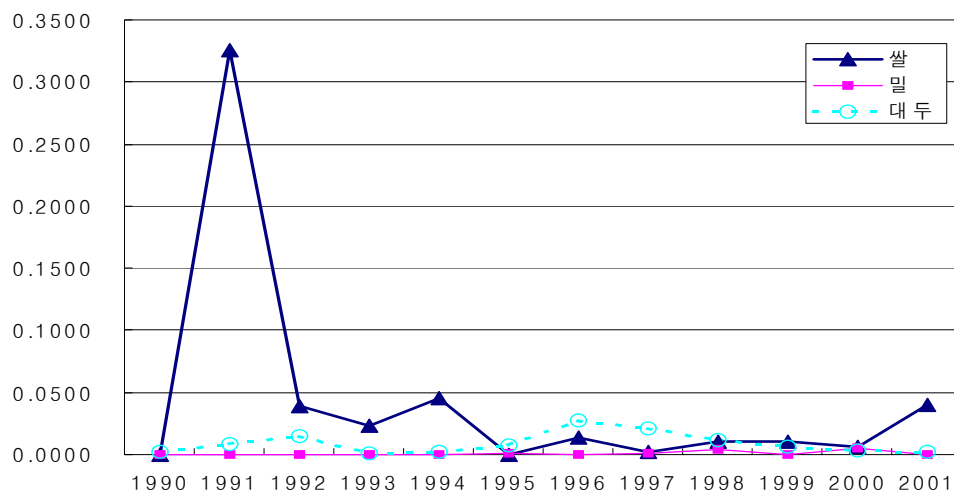
구 분	한국				일본				가격비
	2000	2001	2002	평균	2000	2001	2002	평균	
쌀	2,032	2,004	1,981	2,006	3,514	3,590	3,360	3,488	1.74
오이	1,200	1,489	1,431	1,373	2,853	2,658	2,680	2,730	1.99
토마토	999	1,297	1,481	1,259	3,137	3,241	2,950	3,109	2.47
배추	526	243	292	354	545	720	560	608	1.72
양파	495	397	344	412	776	900	660	779	1.89
무	409	179	275	288	850	900	810	853	2.96
대파	747	657	734	713	2,696	3,177	2,950	2,941	4.12
당근	613	719	580	637	1,185	1,144	1,110	1,146	1.80
밀감	850	1,090	975	972	2,413	2,203	2,130	2,249	2.31
사과	1,746	2,143	2,750	2,213	2,958	3,124	2,070	2,717	1.23
배	1,456	1,868	1,651	1,658	2,990	2,383	2,550	2,641	1.59
포도	1,571	1,589	2,127	1,762	7,165	7,413	6,300	6,959	3.95
쇠고기	9,150	8,842	7,687	8,680	14,361	13,301	10,690	12,784	1.47
돼지고기	2,117	2,506	2,391	2,338	3,955	4,596	4,330	4,294	1.84

주: 가격비는 일본 가격을 한국 가격으로 나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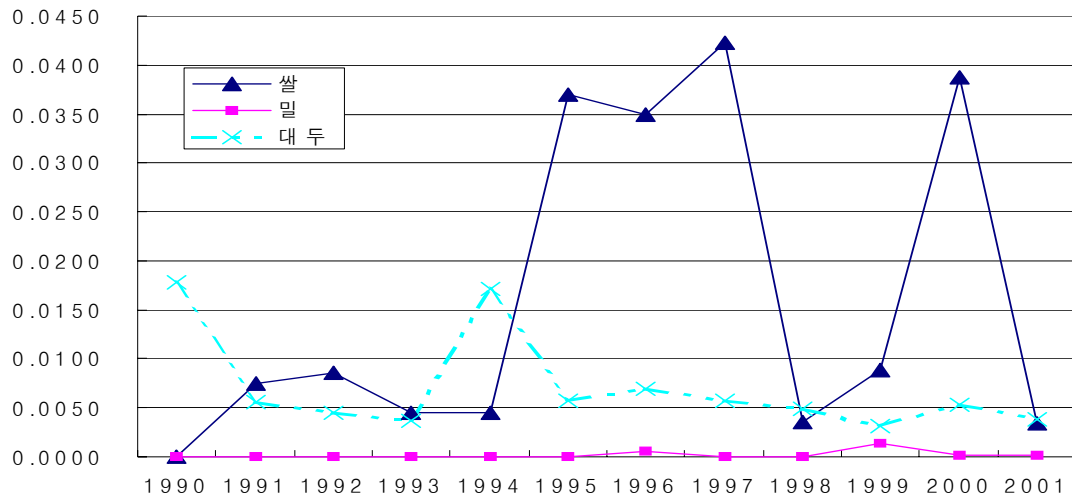
4.2.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곡물류의 RCA 지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 낮게 나타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쌀의 국내외 가격차는 1990년대 중반이후 확대되어 국제경쟁력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RCA 지수는 0.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국제경쟁력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밀과 대두 또한 쌀과 비슷한 국제경쟁력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쌀의 RCA 지수는 연도별로 편차가 크나 대부분 0.05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밀과 대두는 쌀보다 국제경쟁력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두의 경쟁력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림 3> 한국의 곡물류 현시비교우위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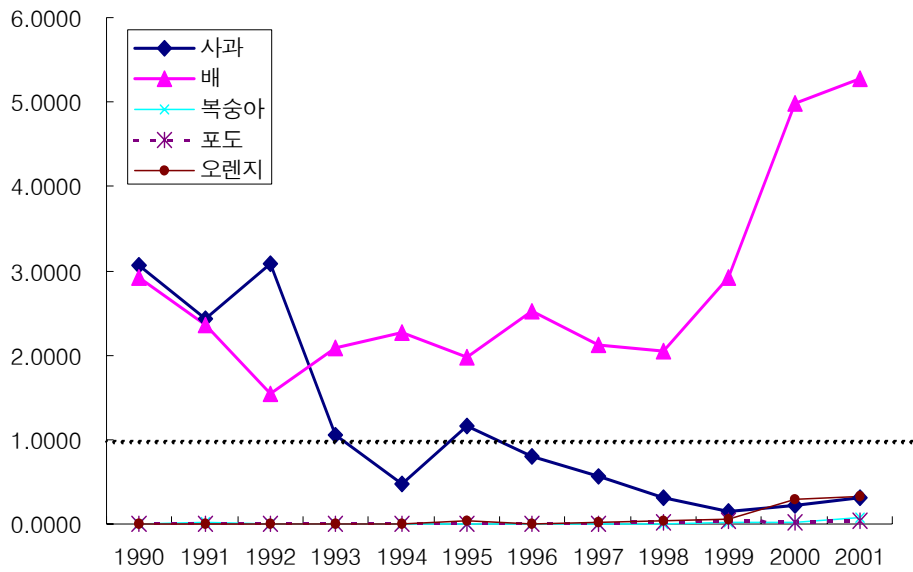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곡물류 현시비교우위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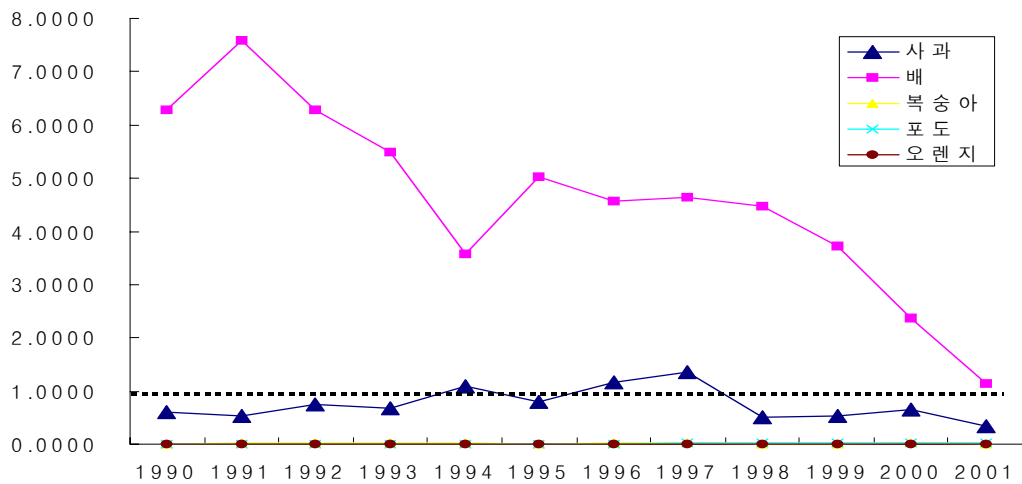
한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곡물류와 축산물은 다른 품목에 비해 피해가 큰 품목들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곡물과 축산물은 동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국가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신선 과실과 채소는 유해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커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 지역이 많고 관세가 인하되어도 관세 이외에 비관세 장벽과 같은 식물검역법이 보호막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한국의 채소와 과수 재배면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국의 과실류 가운데 사과와 배는 국제경쟁력이 있어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사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RCA 지수도 1 이하로 하락하였다. 사과 수출의 부진은 대만과의 구상무역 중단 등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배는 RCA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포도, 복숭아의 RCA 지수는 매우 낮아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사과와 배를 제외한 다른 과일의 RCA 지수는 매우 낮아 한국과 유사한 상태이다. 배의 RCA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에 수렴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사과의 RCA 지수는 1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과실류 국제경쟁력은 낮으며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배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림 5> 한국의 과실류 RCA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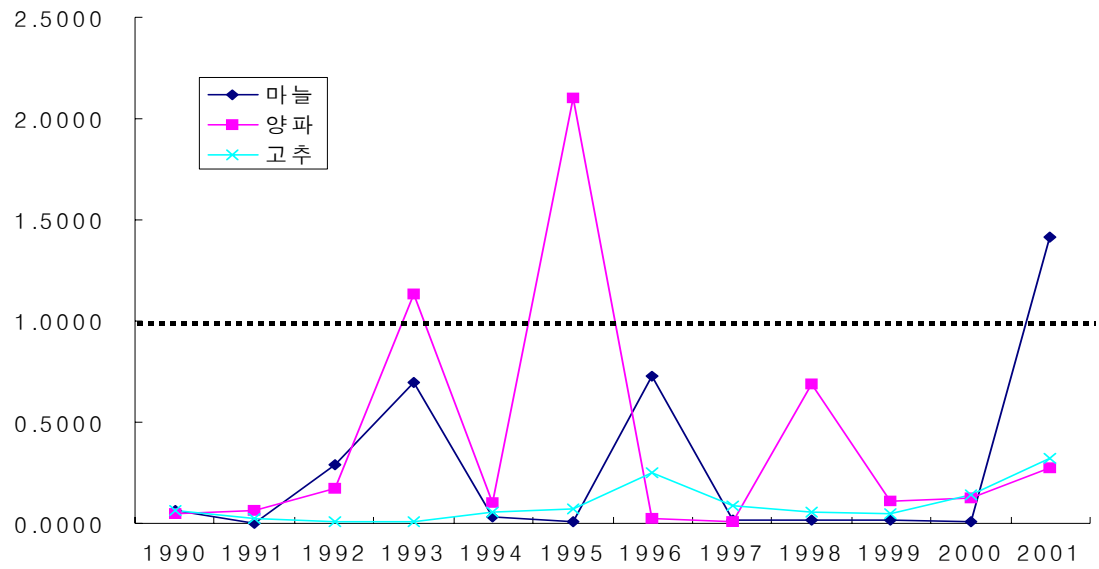


<그림 6> 일본의 과실류 RCA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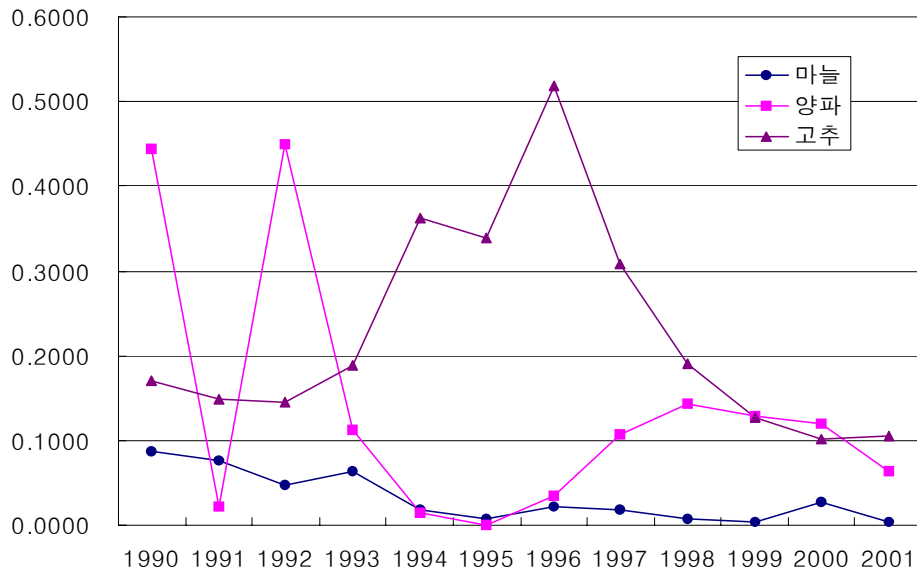


양념채소류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일 양국을 비교할 때 한국의 RCA 지수가 일본 보다 높아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한국의 양념채소 RCA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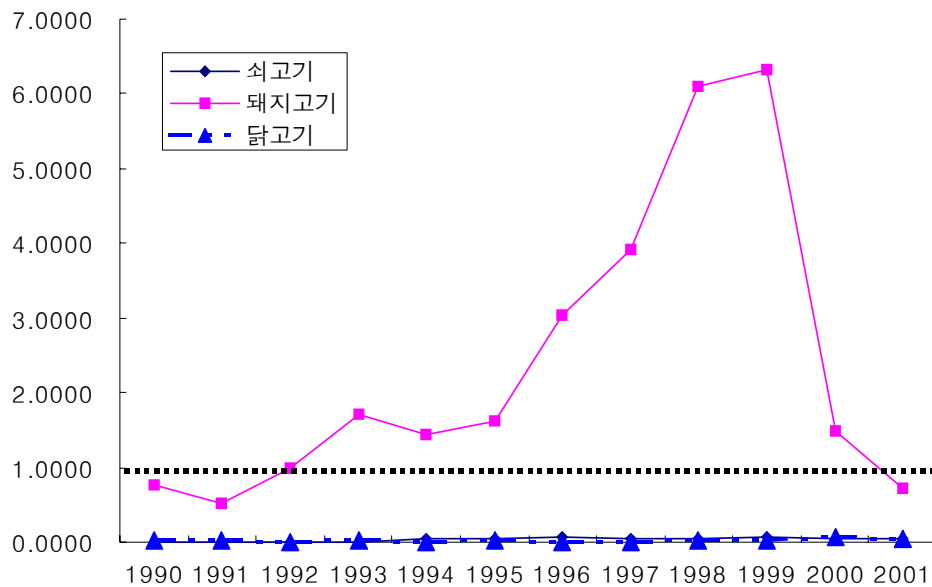


<그림 8> 일본의 양념채소 RCA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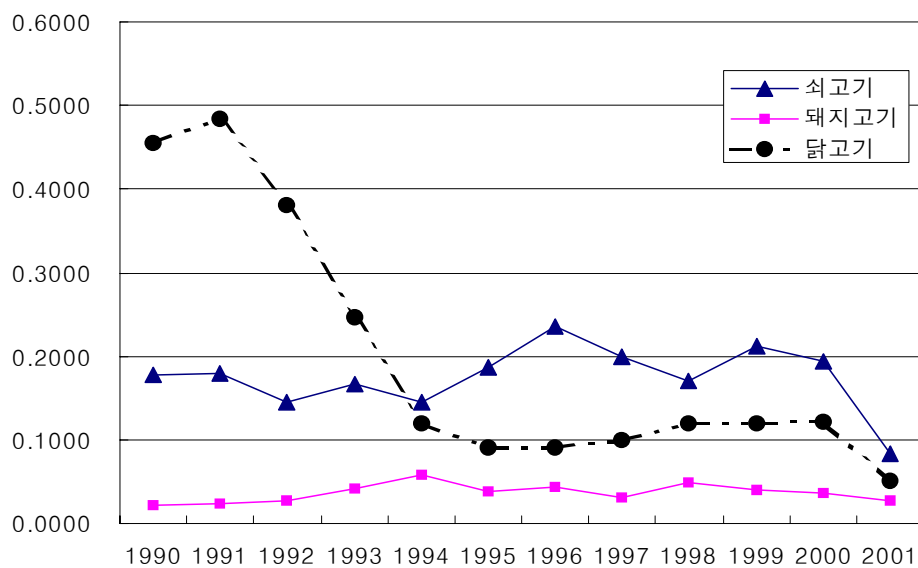


축산물에는 한국의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돼지고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RCA 지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가격경쟁력 이외에 품질 등 기타 요인이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한국의 축산물 RCA 지수 변화



<그림 10> 일본의 축산물 RCA 지수 변화



5. 한·일 농산물 관세 비교

관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FTA 실제로 부과되는 관세인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 평균 실행관세는 한국이 58%, 일본이 22%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가 일본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대한국 농산물 수출이 부진한 이유가 관세율 때문이 아니고 0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수입 증가 품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품목은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품목은 주로 가공식품으로 코코아 조제품, 기타 가공식품, 곡물조제품, 설탕과자 등이다. 일본에 있어서 관세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품목은 낙농품, 채소, 유지작물, 전분,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곡물조제품, 기타조제식품 등으로 가공식품이 많다. 그밖에 육류, 육류조제품, 곡물, 과일조제품, 채소조제품 등의 관세율도 높은 편이다.

한국은 채소, 곡물, 전분, 인삼, 유지작물 등에 대하여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그밖에 낙농품, 과일, 향신료 등에 대하여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관세율이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품목은 곡물, 전분, 인삼, 채소, 과일 등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선 농산물이다.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는 한국의 경우 신선 농산물 분야에서 일본보다 높으나 가공식품은 일본이 오히려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 사이에 한국은 역관세가, 일본은 누진관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0> 한·일 평균 실행관세율

단위 : %

구분	한국 (2004년)	일본 (2003년)	관세 차이 (한국-일본)
01류 (산동물)	15.5	2.4	13.1
02류 (육류)	22.1	19.9	2.2
04류 (낙농품)	61.8	55.0	6.8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9.3	0.3	9.0
06류 (산수목, 꽃)	11.0	0.4	10.6
07류 (채소)	116.7	30.3	86.4
08류 (과실)	72.7	8.6	64.1
09류 (커피, 향신료)	62.7	3.5	59.2
10류 (곡물)	215.8	12.6	203.2
11류 (밀가루, 전분)	311.8	33.5	278.3
12류 (유지종자, 인삼)	113.8	28.4	85.4
13류 (식물성액즙)	99.4	2.8	96.6
14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	5.0	1.9	3.1
15류 (동물성 유지)	17.7	5.0	12.7
16류 (육 조제품)	32.6	17.8	14.8
17류 (당류)	19.7	28.1	-8.4
18류 (코코아류)	10.9	35.9	-25.0
19류 (곡물조제품)	10.9	37.6	-26.7
20류 (채소, 과실 조제품)	33.9	16.4	17.5
21류 (기타 가공식품)	33.5	33.7	-0.2
22류 (주류, 음료)	29.2	14.6	14.6
23류 (조제사료)	12.5	0.8	11.7
24류 (연초)	30.9	5.1	25.8
전체평균	57.8	22.1	35.7

주 : 한국은 농산물 1304개 품목 중 쌀 관련(16개) 품목 제외
일본은 농산물 1676개 분석.

6. 한국 농업에 대한 한·일 FTA의 파급영향

6.1. 선행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기초연구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 평가와 전망」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은 6,200만 달러의 증가가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는 4,9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분야의 긍정적 효과는 이보다 큰 8억 5,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즉, 가공식품 분야가 한·일 FTA 체결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산업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김도형 외(1999)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관세철폐의 산업별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농림수산물 대일본 수출은 1.46%(물량 기준) 증가하고 음·식료품 수출은 7.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경우에도 대일본 수입 증가율이 각각 7.9%와 16.34%로 나타나 수출증가율을 능가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수출 증가 규모가 수입 증가 보다 커 농림수산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대일본 경상수지 적자는 33억 6천만달러 증가하고 국민총생산은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추정

일본과의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산 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품목별 수출 효과 등 CGE 모형에서 추정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출수요 함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GE 모형의 결과는 부분균형 모형 결과보다 파급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CGE 모형은 국민경제 전체를 모형에 포괄하며 교역 상대국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분석에 들어가는 부문은 통합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6.2.1. 품목별 수출증대 효과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한국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주요 품목별 수출수요 함수를 추정하였다. 계량경제 모형에 의한 수출수요 함수 추정은 일정 기간 이상의 수출 관련 자료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농산물 가운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10대 수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공식품 및 기타 농산물은 다음에서 다룰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에서 다루었다. 계량경제 모형에서 다루고자 하는 10대 신선 수출 농산물도 CGE 모형에서 다루어지나 CGE 모형에서는 이들 품목이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수출수요 함수는 해당 품목의 상대가격(수출가격 대비 수입국 가격), 환율, 수입국의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산물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영향 때문이다. 관세 철폐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관세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출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성치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세가 0%인 화훼류의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관세체계가 기본적으로 누진관세 구조를 지향해왔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신선 농산물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계측한 10개 품목 가운데 김치와 밤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5% 이내이다. 돼지고기는 차액관세 형태로 비교적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다.

관세인하와 수출증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수출수요의 가격 탄성치이다. 여기서 다루어진 품목들의 경우 가격 탄성치는 대부분 1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관세인하가 이루어 질 경우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관세가 낮아 관세인하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 농산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인하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품목은 관세율이 높고 수출규모가 큰 김치와 깻밤이다. 이들 품목은 가공된 농산물로 분류되어 관세가 높게 부과되고 있다. 돈육의 경우 차액관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여기서는 현재 정상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4.3%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기준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돈육 수출수요의 가격 탄성치가 높아 2천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 수출하는 김치의 관세율은 12%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가 완

전히 철폐된다면 1,400만 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밤은 관세율이 9.6%로 높고 수출수요의 가격탄성치도 2.74로 관세철폐시 수출증대 효과가 2,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추의 경우 역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88만 달러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고추에 대한 일본의 관세는 3%로 낮은 편이다. 토마토의 수출수요에 대한 수출가격의 탄성치는 매우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현행 관세인 3%가 완전철폐 내지 부분철폐 된다고 해도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토마토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고 해도 수출증대효과는 4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지는 관세율 5%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경우를 가정해도 20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정도이다.

종합적으로 여기서 추정한 10대 신선 농산물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5,800만 달러이다. 이 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이 발표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 수출증대 효과 6천만 달러에 비해 큰 규모이다. 왜냐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농업부문(가공식품 제외)을 포괄한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 추정한 10개 품목은 대일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2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품 목	수출액(천달러) (2000년)	관세율 (2000년)	가격 탄성치	관세인하효과 (수출증가액, 천달러)	
				50%	철폐
김치	76,463	12%	-1.54	7,065.2	14,130.4
토마토	22,331	3%	-0.06	20.1	40.2
가지	4,306	5%	-0.91	98.0	195.9
고추	28,248	3%	-1.05	444.9	889.8
장미	10,295	0%	-1.46	0	0
백합	4,384	0%	-0.13	0	0
밤	83,899	9.6%	-2.74	11,034.4	22,068.8
국화	4,682	0%	-1.68	0	0
오이	9,881	3%	-1.29*	191.2	382.4
돈육	330,896	4.3%	-1.43	10,173.4	20,346.8

* 화훼를 제외한 기타 품목들의 평균임.

6.2.2.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사용한 모형의 일반균형방정식체계는 변수들의 정의식, 가격, 기업 및 정부의 적정화조건과 상품 및 생산요소시장의 청산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본은 각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노동은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였다. 일반균형 방정식체계의 균형값은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1998년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405산업 부문을 33개산업으로 재분류하여 통합한 후에 1997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도 산업연관표를 RAS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이용된 자료가 현재의 변화된 교역 및 농업구조를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농업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화훼, 채소, 과실, 미곡 생산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맥류, 잡곡류, 기타경종작물의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생산 부문은 쌀을 제외하고는 축산, 과실, 채소 등 경제작물 등에 비해 비교우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공식품 분야도 생산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출의 경우 과실, 채소, 화훼, 돈육 등에서 괄목한 만한 증가가 예측되었다. 수출 증가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 21%, 과실 27%, 화훼 6%, 도축육 47%, 육가공품, 12%,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8% 등이다. 이러한 수출 증가율은 앞서 예측한 계량경제모형의 결과와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쌀의 경우 양국간의 수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가공식품의 수출증대 효과는 제과, 제빵, 면류 등 완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식품 원료 및 소재(향료, 첨가물 등)는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완제품 수출 및 소재 수입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산업	산출(%)	수출(%)	수입(%)
1. 벼	1.52	-5.68	34.69
2. 맥류	-12.92	-7.03	11.60
3. 잡곡류	-21.98	-3.89	15.70
4. 채소	1.51	21.04	33.00
5. 과일	1.76	26.80	31.10
6. 기타작물	-8.96	-8.25	19.16
7. 화훼작물	1.28	6.26	31.87
8. 낙농	2.40	·	·
9. 육우	4.57	-3.04	28.54
10. 양돈	1.61	·	24.03
11. 가금	3.33	2.19	26.24
12. 기타축산	0.29	12.48	26.09
13. 농림어업서비스	0.73	·	·
14. 임산물	-14.33	-5.29	14.03
15. 수산물	3.63	18.06	25.86
16. 도축 및 가공육	1.53	47.49	34.11
17. 육가공품	2.72	12.46	26.84
18. 낙농품	2.29	16.22	29.68
19. 수산가공품	4.85	10.01	26.66
20. 정미	1.15	-5.72	34.13
21. 정맥 및 제분	1.77	0.16	18.78
22. 담배	3.27	-3.03	19.86
23. 과일 및 채소가공품, 기타음식료품	1.55	17.58	24.75
24. 배합사료	2.53	7.59	25.53

대일본 농산물 수출은 잡곡류, 기타작물, 임산물을 제외하고 전체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과일, 화훼류의 수출은 각각 27%, 36%,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일 FTA 체결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축육과 육가공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율은 신선 농산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공식품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누진관세 체계와 이로 인한 가공식품 부문의 높은 관세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배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담배 수출 규모가 작아 절대액 면에서는 의미가 크게 낮아진다. 한·일 FTA 체결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한·일 FTA의 대일본 수출 효과

산 업	대일수출(%)	기타수출(%)	대일수입(%)
1. 벼	·	-5.68	·
2. 맥류	·	-7.03	·
3. 잡곡류	-3.79	-9.56	-53.89
4. 채소	26.79	-9.29	7.21
5. 과실	36.21	-9.79	65.12
6. 기타작물	-9.44	-6.78	-43.59
7. 화훼작물	25.79	-7.26	-11.78
8. 낙농	·	·	·
9. 육우	-3.04	·	·
10. 양돈	·	·	·
11. 가금	51.45	-4.71	·
12. 기타축산	13.23	-7.77	-28.14
13. 농림어업서비스	·	·	·
14. 임산물	-4.20	-8.45	-45.44
15. 수산물	22.37	-8.10	-7.97
16. 도축 및 가공육	48.09	-10.98	-3.83
17. 육가공품	78.20	-6.74	11.69
18. 낙농품	91.36	-7.73	55.33
19. 수산가공품	37.53	-6.07	-17.03
20. 정미	·	-5.72	·
21. 정맥 및 제분	76.21	-3.56	-28.10
22. 담배	917.59	-4.44	-24.94
23. 과실 및 채소가공품, 기타음식료품	97.68	-7.60	28.21
24. 배합사료	14.29	-5.26	46.37

7. 한·일 FTA 추진 방향

이 연구에서는 한·일 FTA가 농업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전반에 걸쳐서는 한국의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특히 기술 의존적)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일본 무역수지적자 증가는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일본이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양국간 정치,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에 미칠 FTA의 긍정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한·일 FTA는 일본 국민들의 한국 Passing 경향을 감소시키고 이웃 나라로서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완전한 형태의 FTA 체결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기형적 형태일지라도 일정부분의 예외와 유예 등을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 FTA 체결은 투자협정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세 철폐의 효과는 크지 않고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가 이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 추진은 다음 단계로 중국이 포함되는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구상 속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전략의 틀 속에서 농업부문의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비관세장벽 철폐 및 조화

한·일 FTA의 영향계측 결과(KREI, KIEP, KIET 등)에 의하면 한국측이 관세 인하로 인하여 전체 경제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에 투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고, 비관세 장벽 철폐, 기준과 규격의 조화 등을 포함시킬 경우 장기적으로는 양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FTA 체결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철폐 협상에 주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사전적으로 기반조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추정된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순수한 가격차와 관

세철편 효과를 의미한다. 품질의 차이와 비관세장벽에 의한 교역제한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이 한·일 FTA로 농산물 수출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철폐 또는 조화시키는 데에 협상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동식물검역, 통관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상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비하여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분석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일류는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과, 배, 감귤 등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과일에 대하여 일본은 까다로운 식물검역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수급 사정에 따라 작황이 좋을 경우 일본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병해충에 대하여도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응애 부착 여부에 대한 검사와 훈증 소독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일본의 상관습(규격, 품질, 품종, 거래 관행 등)은 매우 폐쇄적으로 관세철폐로 FTA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 상관습 등에 대한 사전분석 및 조화작업 등 정지작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식품제조공전의 차이(예, 식품첨가제 허용기준 등) 등 한국의 기준과 일본의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규격 및 표시제도 또한 상이하다. 축산질병 발생시 수출금지 지역의 범위 등도 양국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국제적인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양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로 우리나라 농산물과 일본산이 별개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여 우리가 요구할 개방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산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품목들은 개방이 어렵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수입과 관련된 일본의 강제적인 기술규정 관련 법률은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전기용품거래법 등 50여가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품질을 표시하는 인증제도는 사실상의 강제표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로 일본공업규격(JIS)과 일본농업규격(JAS), S 마크, G 마크 등이 있다. 식료품과 임산물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농림규격·품질표시법(JAS법)은 1999년 의회에서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표시의 확충과 유기농산물 및 식품 검사·인증 제도를 창설하는

것과 신선야채 9품목에 대해 의무화 되어있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전품목으로 확대 된 것이다.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를 JAS법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자 하는 것은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② 농림수산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일본의 기본 입장은 농업분야는 예외로 하고 WTO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기본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무관세로 양허된 480여개 농산물에 대해서만 협정에 포함시킨 바 있다. 싱가포르 산업 가운데 농업은 중요한 산업이 아니며 일본이 우려할 만한 수출품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도 돼지고기, 오렌지 등 극히 일부 농산물의 양허안 문제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등 농산물이 협상에 있어서 민감한 부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일간의 FTA 추진에 있어서도 일본은 농업부문이 가장 민감한 부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개방 폭 확대 요구를 통해 농산물 수출 증대와 우리나라의 취약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농업부문을 전략적 협상분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③ 제3국과의 FTA 체결 고려

한·일 FTA 협상은 한국이 앞으로 거대 경제권과 추진할 FTA의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협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통상협상, FTA 체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FTA 체결에 있어서는 이익이 될 조항도 한·중 FTA 문제나 기타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손실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일 FTA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일 FTA가 동북아 지역에 미칠 역학구도 변화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중·일 3국의 FTA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2003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제안). 동북아 FTA 추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농업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농업부문에 대하여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이다(예, 후안강 칭

화대 교수, 서장문 중국 국제경무연구원 교수 등).

미국 등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당사국들의 견제가 예상되며, 특히 미국은 한·일 FTA에 대하여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한·일 FTA로 인한 새로운 차별에 필적할 만한 시장개방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미국 등 기존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입장과 향후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④ 농산물 수출 증대의 제약성 및 수입 증가 품목 고려

한·일 FTA 체결은 최근 수출이 많은 기존의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추가적 수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돈육(1999년 시장점유율 13.4%)과 소주(알콜성 음료 시장의 4.3%), 국화(13.0%) 등 일본 수입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품목은 수출 증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이(100%), 가지(99.7%), 토마토(76.2%)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의 추가적인 수출 확대 가능성은 일본산과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품질경쟁력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밤, 송이버섯 등은 수출규모가 큰 품목이나 국내 수급 사정상 수출 증대가 제한될 전망이므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 철폐가 수출증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현행 실행세율이 높은 품목인 베이커리 반죽, 감귤, 소주, 김치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조사와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일 FTA는 한국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담배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높아 FTA로 인한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녹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녹차 산업을 비교하면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한·일 FTA로 인한 녹차와 녹차제품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부 패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협상 및 국내대책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차액관세 및 종량세 철폐

일본은 차액관세와 종량세 부과 품목이 많아 관세제도가 한국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진다. 차액관세제도 대상품목 돈육, 유제품, 완두콩, 팥, 강남콩, 소맥, 쌀가루, 보리가루, 전분 및 이눌린, 낙화생, 등 많은 농산물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가 냉동, 냉장육 및 부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이 기준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돈육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내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후지 및 전지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일본의 돈육 관련 관세제도는 이러한 부위의 대일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차액관세 철폐 문제는 일본이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도 쟁점으로 등장한 부분이다. 또한 EU의 경우 일부 복합세 부과 품목에 있어서 종량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일본이 많은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종량세도 종가세와 같이 철폐되도록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형, 유관영 외. 1999.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전략,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제151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한일 공동심포지움 자료집.
- 어명근, 최세균 외. 2003.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467.
- 이정환. 1998.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21.
- 최세균, 김태곤.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1-25.

<부 표>

<부표 1> 한국의 전·겸업농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 천 호

구 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 (‘90-’02)
농가호수	1,767(100.0)	1,501	1,383	1,280(100.0)	-27.6
전업	1,052(59.5)	849	902	862(67.3)	-18.1
겸업	715(40.5)	652	481	418(32.7)	-41.5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부표 2> 한국의 축종별, 규모별 사육두수 변화

단위: 천두(천수), 천호, 두(수)/호

	1990		1995		2000		2002	
	사 육 두 수	호 당 사육두수	사 육 두 수	호 당 사육두수	사 육 두 수	호 당 사육두수	사 육 두 수	호 당 사육두수
젖 소	504	15	553	23	544	42	544	45
육 우	1,622	3	2,594	5	1,590	5	1,410	7
돼 지	4,528	34	6,461	140	8,214	342	8,974	528
닭	74,463	4,63	85,800	423	102,547	470	101,693	578

<부표 3> 일본의 전·겸업농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 천 호

구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 (‘90-’02)
농가호수	3,834(100.0)	3,444	3,121	3,027(100.0)	-21.0
전업	473(12.3)	428	426	439(14.5)	-7.2
겸업	2,497(65.1)	2,224	1,912	1,809(59.8)	-27.6
기타	864(22.5)	792	783	779(25.7)	-9.8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부표 4> 일본의 축종별, 규모별 사육두수 변화

단위: 천두(천수), 천호, 두(수)/호

	1991		1995		2000		2002	
	사 육 두 수	호 당 사육두수	사 육 두 수	호 당 사육두수	사 육 두 수	호 당 사육두수	사 육 두 수	호 당 사육두수
젓 소	2,068	35	1,951	44	1,764	53	1,726	56
육 우	2,805	13	2,965	17	2,823	24	2,838	27
돼 지	11,335	315	10,250	545	9,806	838	9,612	961
닭	188,786 (139,298)	13,792	193,854 (146,630)	20,059	187,382 (140,365)	28,704	181,746 (137,718)	30,401

주 1) 사육두수 중 () 내는 6개월 이상의 성계암컷 닭의 수입.

2) 농가수 중 () 내는 종계만의 사육자를 제외한 채란계 사육자의 수입.

3) 농가수에서 닭의 경우 1991~97년은 성계암컷 300수미만의 사육자 제외, 1998년 이후는 성계암컷 1,000수미만의 사육자 제외, 1998년부터 성계암컷 1,000수 이상의 사육자를 조사대상으로 한 수치임.

4) 닭의 호당 사육수는 성계암컷 사육수(=성계암컷/채란계 농가수)임.

자료: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畜産統計」 각 연도.

<부표 5> 한국의 농산물 자급률

단위 : %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곡 류	43.8	35.1	28.3	26.8	32.7	30.8	31.0
- 쌀	108.3	97.4	87.7	89.9	104.5	102.9	99.2
- 보리	96.1	82.6	51.0	73.5	56.8	46.9	60.4
- 밀	0.1	0.0	0.0	0.4	0.1	0.1	0.2
- 옥수수	1.9	1.2	1.4	0.8	1.2	0.9	0.7
서 류	100.0	102.4	95.0	99.7	99.4	98.9	99.0
두 류	24.5	15.1	14.9	11.7	11.1	8.2	8.8
종실류	86.3	67.1	40.9	42.1	44.7	34.2	32.6
채소류	98.9	99.4	97.8	98.7	97.8	97.7	97.3
과실류	102.5	91.8	92.1	92.6	94.3	88.7	88.9
육 류	92.9	92.3	91.0	90.8	96.4	83.9	82.0
- 쇠고기	53.6	44.2	54.6	53.8	76.4	53.2	36.6
- 돼지고기	100.3	102.8	98.3	99.3	104.6	91.6	96.9
- 닭고기	100.0	102.3	99.2	97.6	94.0	79.9	76.0
계란류	100.0	100.2	99.6	100.0	99.8	100.0	100.0
우유류	92.8	94.2	92.9	83.1	89.0	81.2	81.0
유지류	8.0	5.5	3.8	5.3	4.5	3.2	3.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부표 6> 일본 농산물 자급률

단위 : %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곡물(식용+사료용)	30	29	33	29	27	28	28
주식용 곡물	67	66	74	63	59	60	60
쌀	100	101	120	102	95	95	95
소맥	15	12	9	7	9	11	11
두류	8	6	5	5	5	7	7
채소	91	90	86	86	84	82	82
과실	63	59	47	47	49	44	44
계란	98	97	96	96	96	95	96
우유·유제품	78	81	72	72	71	68	68
육류	70	65	60	55	55	52	53
우육	51	49	42	39	35	34	36
사탕	33	35	29	28	32	29	32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

<부표 7> 한국의 농산물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국가 연도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기타	계
1993	1,012 (13.9)	151 (2.1)	1,798 (24.7)	572 (7.9)	699 (9.6)	3,037 (41.8)	7,269 (100.0)
1994	1,085 (13.6)	214 (2.7)	1,987 (24.9)	589 (7.4)	676 (8.5)	3,437 (43.0)	7,989 (100.0)
1995	642 (6.6)	293 (3.0)	3,506 (36.2)	624 (6.4)	705 (7.3)	3,908 (40.4)	9,677 (100.0)
1996	822 (7.5)	235 (2.1)	3,950 (36.1)	670 (6.1)	722 (6.6)	4,541 (41.5)	10,940 (100.0)
1997	1,285 (12.6)	232 (2.3)	3,059 (29.9)	696 (6.8)	595 (5.8)	4,365 (42.7)	10,231 (100.0)
1998	776 (12.1)	103 (1.6)	2,109 (32.8)	560 (8.7)	293 (4.6)	2,595 (40.3)	6,436 (100.0)
1999	787 (10.6)	169 (2.3)	2,503 (33.5)	667 (8.9)	384 (5.1)	2,950 (39.5)	7,459 (100.0)
2000	1,466 (17.2)	220 (2.6)	2,437 (28.6)	776 (9.1)	383 (4.5)	3,246 (38.1)	8,527 (100.0)
2001	1,226 (14.3)	212 (2.5)	2,373 (27.6)	665 (7.7)	357 (4.2)	3,759 (43.8)	8,591 (100.0)
2002	1,811 (18.5)	206 (2.1)	2,473 (25.2)	801 (8.2)	409 (4.2)	4,106 (41.9)	9,807 (100.0)

자료: www.kati.net.

<부표 8> 한국의 농산물 국가별 수출

단위 : 백만\$

구 분	중 국	일 본	미 국	대 만	러 시 아	기 타	계
1993	165 (13.0)	704 (55.7)	87 (6.9)	35 (2.8)	38 (3.0)	234 (18.6)	1,263 (100.0)
1994	203 (13.9)	775 (53.0)	95 (6.5)	42 (2.9)	103 (7.0)	244 (16.7)	1,463 (100.0)
1995	307 (17.6)	845 (48.4)	95 (5.4)	80 (4.6)	149 (8.5)	270 (15.5)	1,747 (100.0)
1996	299 (16.4)	824 (45.0)	108 (5.9)	71 (3.9)	245 (13.4)	282 (15.4)	1,829 (100.0)
1997	303 (16.4)	816 (44.1)	108 (5.8)	60 (3.2)	318 (17.2)	247 (13.3)	1,853 (100.0)
1998	237 (14.1)	828 (49.2)	117 (6.9)	61 (3.6)	145 (8.6)	295 (17.5)	1,683 (100.0)
1999	223 (13.0)	978 (57.0)	126 (7.4)	58 (3.4)	51 (3.0)	279 (16.3)	1,715 (100.0)
2000	252 (16.2)	745 (47.8)	146 (9.4)	55 (3.6)	74 (4.8)	286 (18.3)	1,559 (100.0)
2001	241 (15.1)	656 (41.0)	173 (10.8)	47 (3.0)	129 (8.1)	354 (22.1)	1,600 (100.0)
2002	223 (13.5)	548 (33.1)	196 (11.8)	57 (3.5)	120 (7.3)	510 (30.8)	1,653 (100.0)

자료: www.kati.net.

<부표 9> 임산물 대일본 품목류별 수출추이

단위: 천 달러, 톤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임산물 전체	금액	373,509	388,827	253,782	196,475	183,156	152,744	114,156
	수량	385,833	253,032	190,188	131,404	163,501	122,647	56,295
제재목	금액	21,911	14,854	8,961	3,498	7,152	5,052	3,046
	수량	35,236	21,700	12,870	3,785	9,443	7,598	3,830
섬유판	금액	4,810	2,196	15,791	12,426	11,716	11,854	11,922
	수량	8,103	4,234	39,263	33,068	26,830	25,255	25,286
기타목재	금액	6,689	7,923	12,544	10,947	14,671	11,308	8,069
	수량	8,963	1,440	3,196	2,400	3,398	3,612	2,747
버섯류	금액	24,245	68,711	33,323	48,918	33,273	28,823	24,825
	수량	269	922	371	734	511	259	387
견과류	금액	94,199	112,500	84,882	82,097	84,366	71,123	51,264
	수량	13,365	14,669	12,848	13,737	13,217	12,473	8,052

자료: www.kati.net

<부표 10> 임산물 대일본 품목별 수출추이

단위: 천 달러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섬유관류	전체	4,810	2,196	15,791	12,426	11,716	11,854	11,922
기타 목재류	갈판틀	490	1,377	2,024	1,573	4,415	4,020	2,099
	신변장식 용품상자	-	5	4,210	3,650	3,703	1,488	935
	부채	1	1,163	1,892	1,483	1,373	1,210	1,151
버섯류	송이버섯	20,988	64,453	30,086	44,672	30,993	27,529	22,564
	표고버섯	3,257	4,258	3,236	4,246	2,279	1,294	2,261
견과류	밤	93,668	111,835	84,720	80,965	83,899	71,122	51,258
제재목류	침엽수 제재목	21,861	14,079	8,537	3,493	6,126	4,186	2,841

자료: www.kati.net

<부표 11> 축산물 대일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축산물 전체	금액	106,421	136,522	280,629	373,029	101,002	29,238	26,774
	수량	58,190	65,009	106,813	135,799	62,772	45,912	40,646
포유 가축 육류	금액	80,461	102,694	247,582	339,805	67,038	620	812
	수량	18,728	19,361	58,212	87,494	16,813	94	123
기타 축산 부산물	금액	25,062	32,657	28,835	26,165	24,367	20,872	17,053
	수량	39,033	44,502	47,025	45,839	43,312	42,304	36,336

자료: www.kati.net

<부표 12> 주요 품목별 대일본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채소류	채소종자	6,979	10,560	11,123	15,161	15,844	13,129	11,516
	기타채소	469	909	982	799	827	841	1,074
	기타	102	263	490	506	518	324	236
유지 가공품	쇼트닝	88	0	959	1,916	1,944	2,651	1,999
	기타가공품	805	1,544	3,613	2,936	1,189	2,484	2,665
	기타	571	950	286	224	41	44	27
식물성 액즙	기타식물성액즙	3,325	5,217	4,369	3,563	4,480	3,830	4,382
	로우커스트	1,000	2,637	1,024	1,050	1,170	1,322	1,389
	기타	1,219	1,488	1,742	1,642	1,475	1,613	1,582
사료	배합사료	4,407	9,431	7,476	6,628	9,918	8,999	10,143
	사료첨가제	2,598	2,906	2,308	1,855	1,796	1,820	1,493
	기타	600	1,039	1,335	2,050	3,533	4,529	6,725
연초류	권련	37,997	136,632	75,972	40,412	69,381	60,967	47,753
	기타	1	0	0	0	5	0	20
당류	기타 당	1,500	3,737	3,546	2,819	4,805	4,698	4,643
	기타	737	199	683	357	551	483	314
기타조제 농산품	향미용조제품	14,689	16,142	9,470	3,583	3,749	7,130	8,298
	기타	1,036	1,816	4,291	2,540	4,414	2,495	3,514

자료: www.kati.net.

<부표 13> 한국의 대일본 품목류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채소류	7,550	11,732	12,595	16,466	17,189	14,294	12,826
식물성유지	2,519	6,975	4,194	3,494	3,331	3,630	3,534
유지가공품	1,464	2,504	4,858	5,076	3,874	5,179	4,691
식물성액즙	5,454	9,342	7,135	6,255	7,125	6,765	7,353
사 료	7,605	13,376	11,119	10,533	15,247	15,348	18,361
소오스류	9,237	8,607	9,097	9,491	10,460	9,591	11,333
연초류	37,998	132,632	75,972	40,412	69,386	60,967	47,773
당 류	2,237	3,936	4,229	3,176	5,356	5,181	4,957
과자류	2,673	2,805	3,644	3,123	4,701	6,415	7,493
기타조제농산물	15,725	17,958	13,761	7,387	8,163	9,625	11,812
기 타	22,165	26,422	26,833	18,711	20,304	20,609	22,652
계	114,627	236,289	171,437	124,124	165,136	157,604	152,785

자료: www.kati.net.

<부표 14> 한국의 임산물 품목류별 수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톤

연도 부류별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합관	금액	3,067	17,425	24,346	12,353	9,826	5,297	4,396
	수량	458	5,902	6,148	4,313	3,037	2,225	1,425
단관	금액	2,160	2,873	2,846	1,910	2,633	1,351	1,487
	수량	817	967	255	243	490	185	190
기타 목재	금액	7,293	3,648	2,487	3,384	4,320	3,380	1,564
	수량	1,332	689	765	2,952	2,477	2,059	948

자료: www.kati.net

<부표 15> 한국의 축산물 품목류별 수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톤

연도 부류별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기타	금액	109	537	992	634	874	1,126	1,135
	수량	2	10	15	13	14	12	15
기타	금액	1,171	369	691	920	352	367	395
	수량	144	37	73	26	5	11	19
동물성	금액	2,722	2,092	911	1,161	1,544	1,550	1,465
	수량	1,721	1,658	83	77	80	391	165
유지	금액	625	863	666	603	761	681	896
	수량	61	59	64	56	66	58	86
동물성납	금액	7,143	8,055	11,880	10,838	19,295	26,341	29,179
	수량	1,079	1,853	1,434	899	1,636	2,252	2,560
기타축산부 산물	금액	-	-	4,868	4,508	4,386	5,193	5,053
	수량	-	-	263	225	208	194	528

자료: www.kati.net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정치학적 접근: 비준의 정치학
유현석(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 · 일 자유무역협정의 정치학적 접근 : 비준의 정치학

유 현 석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목 차

1. 서 론
2. 한 · 일 FTA 협상의 개용
3. 한 · 일 FTA의 정치학적 분석
4. 한 · 일 FTA의 분석
5. 한 · 일 FTA를 위한 제언
6. 결론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정치학적 접근 : 비준의 정치학

유 현 석(중앙대학교)

1. 서 론

한국과 일본은 2005년까지 FTA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3년 12월 첫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였다.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의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볼 때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사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같은 지역협력정책을 매우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등의 실현에 있어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이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은 한·일 FTA가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외국인투자 확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 과학기술 및 산업협력 확대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한·일 FTA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그다지 신통치 않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단기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 일본과의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 명확한 산업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노동계 역시 한·일 FTA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한·칠레 FTA의 경험을 되돌아본다면 한·일 FTA의 성공적 체결은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본 논문은 한·일 FTA 협상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일 FTA의 성공적 체결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한·일 FTA 협상의 성공적 체결을 위한 조건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일 FTA를 정치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한·일 FTA가 경제적 이득을 위한 국가간의 경제협력의 성격을 가지지만 결국 협상의 체결은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간의 갈등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이득을 분배하는 전형

적인 정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일 FTA를 정치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때 한·일 FTA에 대한 경제적 득실을 근거로 한 당위론과 낙관론을 넘어서는 현실적 정책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2. 한·일 FTA 협상의 개요

한·일 FTA의 시작은 1998년 9월 오쿠라 가즈오 당시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 FTA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로부터 한달 후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에서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하였고 양국 정부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 경제연구소(아지켄)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방일중 양국간 FTA에 관한 민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쌍무적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기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1년 상반기에 설치되었으며 2001년 9월 서울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2년 1월 이 포럼은 양국 정부에 한·일 FTA의 조기 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일 FTA논의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2002년 3월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수상이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양국의 학계와 재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산, 관, 학 공동연구회’를 조기에 발족시키기로 합의하면서이다.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정상은 ‘한·일자유무역협정 산, 관, 학 공동 연구회가 제출한 공동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 보고서 건의에 입각하여 한·일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교섭을 연말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03년 12월 22일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열렸다.

한·일간의 FTA는 그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신중론이 우세했다. 그 이유는 양국의 경제규모나 수준의 차이, 산업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한국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세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국내의 인식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한·일 FTA 협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한·일 FTA 협상의 신속한 진행은 몇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 추세이고 이것은 동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모두 경쟁적으로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ASEAN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이후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해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03년 10월 아세안 국가들과 FTA 토대 구축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고 12월 동경에서 개최된 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정부간 교섭에 합의, 2012년까지 FTA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 역시 동아시아에서 몽골과 함께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못한 나라로서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칠레와의 FTA 체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멕시코,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검토 중이고 한, 중, 일 FTA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뒤떨어질 수 없다는 양국의 적극적 자세의 결과로 보인다.

둘째, 첫 번째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한·일간의 FTA 추진은 양국가의 국가전략의 변화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현재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일간의 FTA 체결은 이러한 국가전략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일 FTA가 침체된 일본 경제에 수출 증가를 통한 활력을 줄 수 있고 일본이 지역협력체가 없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협력체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과의 FTA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FTA의 협상은 일본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의 ASEAN 접근에 대응하여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일간의 FTA 협상은 아직까지는 매우 순조로워 보인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중소기업청이 4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의 86%가 찬성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일 FTA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불가피론, 대세론, 당위론, 그리고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FTA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행위이지만 그 경제적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정치적 행

위의 산물이다. 특히 한·일간의 FTA는 경제적 계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이 협정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일 FTA의 성공적인 체결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비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3. 한·일 FTA의 정치학적 분석

3.1. 정치학적 분석의 필요성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학적 주제이지만 많은 정치학 연구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주제로 삼고 있다.²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치학적 관심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관심이다. 주로 자유무역협정이 어떠한 국내정치적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멕시코의 농민저항운동과의 연관성, NAFTA가 어떻게 미국의 정치경제(산업구조, 노동운동의 패턴 등등)에 영향을 미쳤는가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한·일 FTA의 경우는 한·일 FTA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관심들도 정치학적 영역에 속하는 연구주제들이다. 둘째는 자유무역협정의 성공 조건에 관한 관심이다. 어떤 요인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어떤 조건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큰가? 등이 또 하나의 주제이다. 정치체제의 형태(민주적 혹은 권위적; 대통령제 혹은 내각책임제)나 정치제도의 특성(선거제도 등) 등이 FTA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본 논문 역시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기 위한 조건들을 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는 시도이다.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이 정치학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은 그것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통해 손해보는 집단과 이득을 보는 집단을 만들어 내며 이 두 집단간의 갈등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특히 손해를 보는 집단은 협정의 체결을 저지하려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이러한 지지와 저항의 갈등 속에서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정치적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은 경제적 실익같은 경제적 변수 이외에 정치적 고려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은 다른 모든 국

20) Frederick W. Mayer. *Interpreting NAFTA: The Science and Art of Poli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제조약과 마찬가지로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준이라는 절차는 철저히 정치적 과정이다. 정치학에서는 비준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공식적 비준으로서 국회에서의 비준처럼 공식적인 형태의 비준을 말한다. 현재 한-칠레 FTA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협정 체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공식적 비준의 과정은 협정체결과는 전혀 다른 논리가 개입되는 정치적 절차이다. 또 하나는 비공식적 비준이다. 비공식적 비준은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에 대한 다수 국민 혹은 관련 이해집단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말한다. 국내여론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같은 것들이 비공식적 비준에 포함된다. 비공식적 비준은 공식적 비준과 달리 협상과정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비공식적 비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대규모 국민적 저항이나 반대운동, 여론의 집중 공격 등)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WTO 쌀시장개방 유예 사례는 비공식적 비준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유무역협정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은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 이 비준이라는 절차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은 양면게임의 성격을 갖게 된다. 양면게임이론에 따르면 국제협상은 협상 상대국가와의 협상 이외에 협상결과와 관련된 국내의 이익집단들과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성격을 갖는다.²¹⁾ 국내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비공식적인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협상상대국과의 국가간 협상이 어려워지며 따라서 국제협상에 임하는 협상대표들은 협상상대국가의 협상 안이나 협상전략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요구를 국가 간 협상에 이용하면서 협상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간 협력의 한 형태인 국제협상의 경우 협상의 결과는 협상국가간의 역학관계, 공통이익의 크기, 혹은 과거의 협력의 경험 유무 등과 같은 변수뿐만 아니라 국내 협상의 내용 그리고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협상에서 국내 이해당사자의 역할 그리고 국내적 요인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다음에서는 대외통상정책, 특히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21) Robert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427-460

3.2. 통상정책과 국내정치적 요인

1) 통상정책과 국내 행위자

통상정책은 일반적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내집단의 영향을 받게된다. 대외통상정책에 의해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 집단은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집단이 어떠한 정책을 선호하는 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한 집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외정책에 대한 국내집단의 영향력 연구에서 이익 집단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는 멘커 올슨의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이다²²⁾. 올슨은 집단의 크기가 효율성간의 관계에 주목했는데 집단내의 행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각의 행위자는 공공재의 확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더 적게 되는데 이것은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지면서 무임승차에 대한 동기가 커지고 집단을 조직화를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국내집단의 영향력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국내 이익집단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내집단간에 생겨나는 정책연합에 주목해야 한다. 피터 케첸스타인은 서구 선진국의 대외경제정책 연구를 통해 대외경제정책의 결정요인에서 지배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연합은 사회계급과, 정당체제나 다양한 제도(정부부처, 은행, 산업단체, 거대 공, 사기업 등) 안에서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적 중계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정부관리, 기업과 금융계의 리더 그리고 영국의 경우 금융계와 재무성(Treasury)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²³⁾. 대외경제정책의 성격은 국내적 정책연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프리 가렛(Garrett 1998)은 지구화에 대한 대응 연구에서 좌파세력과 조직노동자의 연합이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상징되는 지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⁴⁾.

마지막으로 국내 집단의 영향력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22)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23) Peter Katzenstein ed., *Between Power and Plenty*(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8)

24) Geoffrey Garrett, *Partisan Politics in the Global Economy*(Cambridge.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할 점은 대외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행위자에 대한 분석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내 이익집단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헬렌 밀너는 국내이익집단 만큼 정치적 행위자도 중요한데 특히 통상정책에서 대통령의 입장, 정치인들의 선호 등은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⁵⁾.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중요성은 이들이 정책결정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때때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루기 어려운 국내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도 한다. 소위 구속효과(lock-in effect) 라고 하는 이 효과를 노린 대외통상정책은 시장개방이나 국내통상제도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이나 관련 국제레짐에 참여하는 것에서 흔히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국가 간 협력의 결정은 국내정치경제적 동기를 가진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 통상정책과 국내제도

통상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국내제도의 중요성은 국내제도가 국내 행위자들의 영향력, 선호를 변화시킴으로서 통상정책을 포함한 대외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선진국의 비교정치경제연구에 있어 국내제도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다루어져 왔다. 국내제도와 대외정책간이 연관성은 유럽의 소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제도적 특성들 (예를 들어 조합주의적 제도들)이 이들 국가의 개방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²⁶⁾.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국가-사회관계, 자본-노동 관계와 같은 비정형적 제도들이 대외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연구들이 대외통상정책에 있어 국내정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논의는 정치체제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정치체제가 민주적이나 권위주의적이냐는 국가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칠레의 지역주의 정책의 변화는 피노체트정권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민주주의 정부의 영향이 매우 크다. 민주주의 정부는 대외적으로 더 개방적이며 특정이익 보다는 국가전체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주의적 대외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일반적인

25) Helen Milner, *Interests,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26) Peter Katzenstein, *Small State in World Market: Industrial Policy in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논의는 대외정책의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의회에 집중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적 혹은 분야별(sectoral) 이해를 대변하는 의회는 보호무역적이고 더 넓은 부분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개방주의적 대외정책을 선호한다는 논의들이 있다. 이러한 논의 보다 좀 더 정교한 정치제도의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들이 있다. 코우헤이(Peter Cowhey)는 정치제도의 차이(선거제도, 정부권력의 분산 형태, 정치체제의 투명성)가 국가들의 다자주의(WTO, NATO)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²⁷⁾. 다시 말해 통상정책의 안정적 유지가 국내정치제도에 의해 영향받는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미국의 경우, 의회와 행정부의 분리라는 정치구조, 승자우선과 연방선거에서의 소선거구제 등이 미국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계속적 지지를 유지하는 국내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의회-정부 혼합(의회제), 중대선거구의 선거제도가 일본의 다자주의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선거구제도는 공공재적 성격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고 권력분산은 국제적 약속을 뒤집기가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특징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변화를 감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태욱(2001)의 일본의 FTA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코우헤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최태욱은 일본의 변화된 지역무역블록 정책은 1990년대 중반의 일본의 정치적 변화(정당체제의 개편과 선거법 개혁)에 상당 부분 영향받았다고 주장한다. 1994년의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의 선거법 개혁과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의 붕괴는 일본내 국제주의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²⁸⁾.

밀너(1997)는 국내정치제도에 관련해서 정책결정의 구조, 다시 말해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밀너에 따르면 입법권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대외경제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입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경우와 국회에 집중된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성공 가능성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 협정의 비준 절차의 상이성(국회동의를 통한 비준 혹은 국민투표를 통한 비준)같은 제도적 차이도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²⁹⁾.

27) Peter Cowhey "Domestic Institutions and the Credibility of International Commitment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28) 최태욱, "대외통상정책의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한·일 FTA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2001

29) Helen Milner, 1997

4. 한·일 FTA의 분석

4.1. 한·일 FTA의 손익구조

한·일 FTA의 손익구조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³⁰⁾.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한·일 FTA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IEP의 연구결과는 관세장벽의 제거가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최대 60억 달러 정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³¹⁾. 현재 한국의 대일 평균실행관세율은 7.9%로 일본의 대한 평균실행관세율 2.9%에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세철폐 시 한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일 기술의존도가 높은 일반기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자본집약적 산업의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양국의 관세율 차이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게 유리한 분야는 농업을 비롯하여 섬유나 석유화학 분야는 수출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단기적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의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한·일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장기적, 긍정적 효과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이 한·일 FTA가 대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 경쟁격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 등 경제적인 효과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의 시금석, 구조조정의 추동요인 등 부차적 효과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양희, 김종걸박사는 한·일 FTA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대한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동반될 때 기대할 수 있을것임을 지적하고 있다³²⁾..

30)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손찬현,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정책자료 01-03.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박순찬, 「한·일 자유무역지대형성과 자본축적」, 대외경제전문가포럼 토의 자료 2001-1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31) 정인교, 『한·일 FTA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 59

32) 김양희, 김종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4.2. 한·일 FTA의 행위자들

한·일 FTA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일본과 수출입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본과 경쟁하는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이 공동으로 양국간 FTA 체결에 대비해 업종별 입장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한국측의 FTA에 대한 입장은 업종별로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첫째, 한국측 경쟁력이 절대열위인 산업으로, FTA 체결시 대일 수출은 어려우나 대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산업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이다. 이에 해당되는 분야로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인 기계이며, 서비스부문에서는 종합상사이다. 둘째, 대체적으로 한국은 범용제품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어 FTA 체결시 수출증대는 기대되나 고부가가치제품은 단기적으로 대일 수입이 급증하여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이다. 섬유·의류, 석유화학, 철강, 가전, 자동차, 시멘트, 구리(銅) 등이 이러한 업종이다. 셋째, 대일 수입재 사용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한·일 FTA 체결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체탄력성이 낮은 대일 수입중간재의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계, 섬유, 석유화학, 플랜트(국내부문) 등이다. 마지막으로, 업종의 특성상 양국간 FTA 체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업종도 존재한다. 철강, 반도체, 조선, 플랜트(해외부문), 항공, 시멘트, 식품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등의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산업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한·일 FTA에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 FTA의 경우 전경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기업 집단은 한·일 FTA의 주요 지지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해당사자는 노동자들이다. 특히 FTA타결의 결과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 혹은 실업의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한·일 FTA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대집단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일 FTA는 또 다른 측면에서 노동자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일간의 FTA 공동연구 결과로 나온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일간의 FTA는 비관세장벽 철폐문제가 매우 중요한 협정의 요소가 될 것이고 일본은 비관세장벽 문제에 한국의 노사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재계는 한·일 FTA 공동연구회 비관세장벽 소위원회에 1)한국

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2)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3)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4) 퇴직금 산출 유연화 5)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 한·일 FTA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업종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한국의 노동계 전체가 이해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운동에 참여하여 한·일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헬렌 밀너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이해집단 만큼 정치적 행위자의 선호와 역할은 FTA를 둘러싼 정치에 매우 중요한데 특히 통상정책에서 대통령의 입장, 정치인들의 선호 등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한·칠레 FTA와 달리 한·일 FTA에 대한 최고정책결정자의 관심은 매우 크다. 그것은 아마도 노무현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동북아경제중심전략과 한·일 FTA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FTA의 체결이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라는 인식을 최고정책결정자가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한·일 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다행히 농업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정에서의 피해산업이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반대집단들의 반발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와 관련해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파정부의 대통령이라는 한계를 가진 노무현대통령이 한·일 FTA에 대한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에서 보듯이 노대통령이 한·일 FTA 반대를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 없다. 게다가 현재와 같이 야당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해당사자의 측면에서 한·일 FTA협상이 한·칠레 FTA 협상과 구별되는 점은 한·일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결과와 전혀 관계없는 많은 집단들이 협상의 이해당사자로 국내협상과정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집단들이 FTA협상에 큰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이들 집단들은 경제적 이익 같은 한·일 FTA의 긍정적 측면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혀 다른 논리로 한·일 FTA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들 집단을 설득하거나 양보를 얻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민족주의적 집단

일본의 35년간의 식민지배와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망언들은 한국 내에 일본에 대한 증오와 의혹, 경계 심리를 계속 유지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인식과 감정은 한국과 일본과의 모든 관계를 민족논리라는 프리즘으로 보는 ‘민족주의 집단’의 존재를 정당화 시켜주고 있다. 이들 민족주의 집단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 고위층의 망언, 고위정치인의 신사참배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기도 등을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의 표출로 인식하며 한국의 대응은 철저히 민족주의적인 기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문화개방요구는 일본의 문화가 한국의 민족문화를 잠식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한·일 투자협정도 일본 자본의 한국지배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 민족주의 집단의 시각에서는 한·일 FTA는 한국경제를 일본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반민족적 행위이며 한·일 양국의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단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한·일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설득도 경제적 이익과 같은 경제적 논리로는 불가능하다.

한·일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정신대관련 단체, 교과서 왜곡문제관련 단체, 독도문제관련단체, 민족단체, 문화단체(민족적 성향을 가진) 등이 본격적으로 반대연합의 주요한 축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반신자유주의 세력

현재 한·일자유무역협정 반대 연합에 속한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한·일 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 단체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한국의 시민단체가 자기 영역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기 보다는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이념단체의 성격이 강한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진보적 색채를 가진 인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들간의 네트워크가 한국의 시민사회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개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반영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한·칠레 협상과정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한·칠레 FTA로 이득을 보게되는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들이 간담회에 나와 아무 거리낌없이 생산자(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이들이

진정한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시장개방을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보호주의적, 반신자유주의적 이념집단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신자유주의적 집단들은 한·일 FTA문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간의 경제적 국경을 허물고 자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초국적 성격을 점차 강하게 갖게 되는 한·일의 자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양국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FTA의 경우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시장개방과 더불어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포함시킬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일 FTA의 체결은 공공서비스의 상업화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신자유주의 집단에는 노동단체, 농민 단체, 전교조, 예술단체, 학생단체 등 진보적 사회 및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3) 공식적 비준의 문제

한·칠레 FTA는 2002년 11월 서명 이후 1년이 훨씬 넘도록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4년 2월 16일 현재에도 국회에서의 비준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칠레 FTA의 사례는 공식적 비준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1919년 만들어진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미국 내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유명무실하게 된 사례와 이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되었던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가 미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해 무산되고 결국 GATT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 등은 공식적 비준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식적 비준은 결국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상정이나 표결자체를 막는 비정상적 정치행태가 용인되어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원 과반수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다. 자신의 선거구나 직능분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그러한 협정의 비준을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협정을 주도하는 행정부는 보상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따라서 의원들은 국가의 이익과 지역구의 이익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고 정부로부터 보상책을 얻어내는 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이룸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원들의 협정 비준 반대는 반드시 지역구 이익의 대변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한·칠레 FTA의 경우 비준 이전에 농민단체가 주도한 서명운동에서 의원 과반수가 넘는 150여명의 의원들이 반대 서명을 했다. 이들 중 30명 이상은 도시에 지역구를 가진 한·칠레 FTA의 경제적 결과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의원들이었다. 이것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경제적 효과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선거구의 이해와 관계없이 반신자유주의의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8일자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한·칠레 FTA 비준을 반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FTA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견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5. 한·일 FTA를 위한 제언 :

한·칠레 FTA의 교훈으로부터

한·칠레 FTA는 한국의 최초의 FTA 협상이었다. 최초의 협상이었던 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교훈을 남겼다. 이 장에서는 한·칠레 FTA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한·일 FTA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5.1.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문제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한·칠레 FTA는 실질적 경제적 소득도 없는 외교적 한건주의의 결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한다. YS 시절에 이미 ‘계륵’이라고 폐기되었던 카드를 외교적 한탕주의의 결과로 다시 꺼내어 추진했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된 FTA협상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되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국민들 중 한·칠레 FTA를 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한·일 FTA 경우 역시 한국이 일본과 현시점에서 FTA를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경제규모나 경쟁력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일본과 서둘러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는 어렵다. 더더군다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홍보

나 교육 역시 미약한 상황에서 한·일 FTA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할 일은 한·일 FTA가 단순히 단기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일 FTA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FTA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홍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한·일 FTA가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 끼인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일 FTA의 필요성 및 이익이 재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5.2. FTA 절차의 제도화 문제

한·칠레 FTA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왜 하필 경제적 효과도 적고 반면에 농업부문의 반발이 예상되는 칠레를 상대국가로 선정했는가에 대한 것과 왜 이해당사자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협상안이 마련되었느냐 등이다. 이러한 비판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FTA 협상과 관련한 추진 절차가 제도화되지 못해서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대상국을 선정하고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제도화 되어 있었다면 FTA 추진과정의 정당성은 확보되었을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도 이러한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한·일 FTA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고 협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공동연구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서비스시장 개방이 포함되고 비관세장벽철폐의 차원에서 노동문제 등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의 추진절차가 제도화해야 한다. 협상대상국 선정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협상안의 결정은 누가 참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가 등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일 FTA의 경우 이미 협상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큰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라도 절차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3. 국내협상의 부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협상은 양면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통상협

상은 비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상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한·칠레 FTA가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내협상이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국내협상은 국가간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국회비준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협상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농민단체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보상안을 제시한다든지 설득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회비준을 앞두고 시작한 국내협상은 피해를 입게 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양보를 얻어내기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한·일 FTA의 경우도 아직 본격적인 국내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의 반대집단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국가간 협상도 초기 단계라 국내협상의 시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상은 대응적(reactive)으로 할 때 더 어렵고 불리하다. 이해당사자들을 파악하고 반대가 조직화되고 동원(mobilize)되기 전에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한·일 FTA의 반대자들은 피해를 입는 산업에 관련된 집단들만이 아니다. 경제적 측면과 전혀 관계없는 많은 집단들이 한·칠레 FTA 반대연합을 구성할 것이고 그 규모는 한·칠레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민족주의 정서에 기반한 도덕적 정당성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를 일본 자본에게 내주려는 한·일 FTA는 우리민족을 팔아 넘기는 제 2의 경술국치’라고 반대하면서 왜 꼭 서둘러 한·일 FTA를 추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할 때 그러한 반대집단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국내협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지집단의 형성이다. 밀너(Helen Milner)의 NAFTA와 EMU 체결 연구에 따르면 지지그룹(endorse group)의 존재는 국제협상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제협상은 필연적으로 수혜자와 피해자를 만들지만 그 수혜자들이 협상을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고 그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는 협상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³³⁾. 한·일 FTA에서 지지집단의 형성은 어쩌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한·일간의 역사적 관계와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 그리고 최근의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한·일 FTA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는 한·일 FTA를 지지하는 집단이 조직화되기 어려운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한·일 FTA를 지지하는데 있어 심각한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산업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서는 지지집단을 형성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에서

33) Milner 1997, p.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FTA의 진정한 이익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경제의 생존이라는 포괄적 이익규정을 통해 한·일 FTA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하여 지지세력에게 정당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협상의 측면에서 언급해야 할 것은 현재 한국의 통상조직에서는 국내 협상을 담당할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교섭본부가 통상 주무부서이지만 주로 국가간 협상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협상은 보상을 결정할 수 있고 여러 유관부처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재경부가 맡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내협상이 부서의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국내협상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농업문제, 산업구조조정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각 부처를 통괄하는 통상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도 그 동안 Task Force 팀으로 운영되던 『자유무역협정, 경제연계협정실』을 승격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경제실, 일중경제실을 신설했고 경제국에 지역경제연계과를 신설해 FTA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안은 미국과 같이 통상대표부(USTR)를 신설하는 안과 아니면 외국과 같이 FTA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FTA 협상 전권대사를 해당 협상국별로 임명해 FTA협상을 이끌어가게 하는 안도 있을 수 있겠다. 2004년 2월 재정경제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경제과로 하여금 자유무역협정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내협상과 대외협상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획기적인 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4.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

한-칠레 FTA의 경우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이었다. 칠레와의 FTA를 제안했을 때 보여주던 적극적 관심은 그 후 사라졌으며 결국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NAFTA협상에 있어 클린턴의 적극적 역할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정치적 결단이며 정부부처가 국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결단만이 반대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한·일 FTA의 경우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FTA에 대한 반대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을 매듭지을 경우 심각한 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과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한·칠레 FTA 비준안이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은 한·일 FTA의 앞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국가의 대외통상정책이지만 그것에 대한 반대는 꼭 경제적 논리에 근거해 있는 것은 아니다. 농촌이 입게될 피해보다 훨씬 많은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에 대한 농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정치권의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그 반대가 경제적 이해관계 이상의 무엇인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일 FTA는 일단 협상체결이 가시화 되고 지지와 반대의 공방이 시작 되면 한·일 FTA의 경제적 이익이 무엇이나 하는 논의와 함께 민족주의적 논리, 반신자유주의적 논리, 정치적 논리 등을 바탕으로한 반대들이 한·일 FTA 논의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반대의 논리가 경제적 이해가 아닌 상황에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한·칠레 FTA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해당사자들과의 국내협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를 경험했지만 한·일 FTA에 임하는 한국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전략은 거의 발전이 없는 듯 하다. 게다가 한·칠레 FTA비준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대응은 반대세력에게 ‘밀면 밀린다’, ‘버티면 더 얻는다’는 잘못된 학습을 시키고 있다.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은 자유무역협상이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한·일 FTA협상은 한쪽 바퀴만 굴러가는 기형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둘러서 국내협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칠레 FTA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혼란과 진통 그리고 국제적 망신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